

제332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6 호

국회 사무처

2015년4월15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 1. 경제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o 의사진행의 건 1
- 1. 경제에 관한 질문 3

(10시4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순 의원 대표발의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춘진 의원 등 59인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0시4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한 분씩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개조 수준으로 적폐를 척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피아, 부정부패 척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박근혜정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새누리당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부정부패의 몸통이 친박 실세는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너무나 떠들썩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청와대 비서실장 허태열·김기춘·이병기, 광역자치단체장 서병수·유정복 그리고 홍준표, 친박 실세 홍문종까지 대한민국의 총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와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실세가 모두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퇴하라'라고 하면 '정쟁이다'치고 나올까 봐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께 새누리당이 먼저 '사퇴하라. 그리고 가장 먼저 수사받아라. 그리고 특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새누리당이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완구 총리께서는 이제 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서 제일 먼저 수사받아야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총리께서 질의를 받을 대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질의시간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의하고 나면 내일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3000만 원 녹취는 어떡합니까?

자, 이노근 의원님 그러면 오늘 한 게 내일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기가 쉬우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총리께서는 지금 총리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퇴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총리가 이 상태가 되었으면 부총리가 나와서 정책질의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는 어딜 갔습니까?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국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총리가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이 수억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총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친박 실세 8인방, 자원외교 5인방……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발언 중에,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최경환 부총리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외교의 실세 5인방 최경환 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왜 새누리당은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제가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를 경시하는 이 정부, 경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과받아 내십시오.

그리고 또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하기 적절치 않은 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누가 피의자예요, 피의자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요청 의사진행발언드리는 바랍니다.

새누리당도 함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을 ‘피의자’라고 한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김도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피의자라고……」 하는 의원 있음)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서영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기에 제가 지켜봤습니다.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하셨어야 할 말들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말미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출장을 간 데 대해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비난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의 불출석은 4월 9일 자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께 공식으로 국무위원 불출석 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점 말씀드리고, 또 최경환 부총리 본인께서도 오늘 10시 반 출국하기 전에 야당 지도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해의 말씀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출국한 것은 오늘 오후 워싱턴 D.C.에서 2015년 IDB 총회 의장으로서 첫날 IDB 총재단을 만나 금년 3월 한국 총회에서 채택된 부산 합의의 이행 방안과 연간 주요 의제 논의 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경제가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및 정책 공조, IMF 개혁, 투자 및 인프라, 금융 규제, 국제 조세 개혁과 관련한 최근 이슈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G20의 대응을 논의하여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4월 18일에는 세계은행회의에서 향후 15년

간의 세계 개발 목표인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의 재원 조성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경험을 토대로 MDB에서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라부터 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처럼 세계경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사전에 약속된 국제회의에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 AIIB, GIH 등에 대한 우리나라 이익 반영 불가능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표와 모든 분들께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최경환 부총리의 활동에 대해서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국내 정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지탄하는 것은 경제 정당으로서 표방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김도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좌석에서 해 주시는데, 우리 각자가 자기 말은 소임을 잘 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로잡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 중에 가능하시면 좌석에서는 경청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경제부총리 불출석과 관련해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대정부질문 참석은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잡히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사전에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그런 유감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대정부질문 참석에 관한 설득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최경환 부총리가 국제개발은행, IDB지요. IDB의 의장국으로서 총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회의를 주재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양해를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 주신다면 별도의 긴급 경제현안질문을 갖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냐 생각이 됩니다. 여야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경제에 관한 질문

(10시5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해서 아홉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구미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출신 김태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나오시지요.

오늘 경제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수도권……

○김태환 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안 들립니다.

○김태환 의원 수도권 규제를 정부가 다시 완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

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하고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앞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또 지방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조화롭게 잘 정책적으로 이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이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가 그렇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이렇게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더 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0년에 전국 인구 42.8%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48.9%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까지는 50%에 가까운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의 집중이 수도권에 한 70~80% 정도 집중돼 있고 또 대기업 본사의 한 90%가 수도권에 돼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인구 면에서는 최근 2010년 이후에 다소 정체되거나 또는 수도권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봤거나 또는 지방경쟁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아직도 수도권 심화 현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의원** 제가 수도권 규제의 양 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 법이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법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누더기가 되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법이 완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 지방은 죽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단적인 예입니다마는 2011년에 첨단업종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지요?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그 결과로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기도는 모바일이 13%, 디스플레이 업종이 7.3% 이렇게 연평균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연평균 성장이 모바일은 -5.4%, 디스플레이 업종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총리가 자세히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수치를 대해서는 제가……

○**김태환 의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대로 지방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의원**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있는 기업마저 지금 문을 닫고 또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또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날 다시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23건의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중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23건을 봤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지 있었습니다.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이거 검토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하고……

○김태환 의원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또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또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은 지방경제야 죽든 말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그런 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맞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살리겠다는 데 그럼 총리가 동의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조화로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태환 의원 그런데 총리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데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김태환 의원 이거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아니, 재정지원까지 해 준다 하면 수도권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기존의 정책과……

○김태환 의원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다, 현재 있는 기업까지 수도권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존의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정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김태환 의원 이런 완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지방도 엄연한 대한민국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지방이 없는 수도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도 살고 우리 수도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지 이런 규제 완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환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중 FTA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가서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글 번역본을 온라인에 띄워 놓고 이의라든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아직까지 가서명 상태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가서명은 했고요, 가서명해서 영문본을 올렸고 그다음에 번역본까지, 지금 한글 번역본까지 올려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품목별 영향평가는 언제 완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낼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4월 하순경에는 마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 한중 FTA에 따라 가지고 정확한 농업 분야의 피해 예상액이 아직 나오진 않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말씀드리면 농업 부분은 이번 FTA 결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수산 쪽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의원 농업 분야도 피해액이 각 품목별로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왔다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안 나왔지만 그런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의 중요한 품목들은 다 개방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들어가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한중 FTA와 관

계해서 '농업 분야에 크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이번에 가서 명한 한중 FTA에서는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FTA가 아니라도 이미 과거에 우리가 한중 간에 농산물 무역에 많은 부분들이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하고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유사한 품목들을 생산·소비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오는 피해는 굉장히 적지 않을 것이다, 한중 FTA는 그야말로 이제까지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의 완결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의원** 예, 물론 다른 국가와의 FTA보다는 농업 분야가 다소 우리나라에 좀 유리하게 되었다, 가서명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역이득공유제까지도 요구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김태환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 비단 한중 FTA뿐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우리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 요구를 정부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우선은 그러니까 피해 품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전을 확실하게 해 달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밖에도 이 피해보전직불금 적용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특히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라든지 말 농업에 대해서 특히 기반 정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무역이득공유제 이것도 이번 기회에 꼭 좀 실현을 시켜 나오, 이런 당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태환 의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이 약 60%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농민들은 이런 무역이

득공유제 도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100만 서명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률이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황영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서 지금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3년째 계류 중인 것은 우리 산업부하고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뭐 특별하게 산업부나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정부도 이 무역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분야가 있으면 또 손해가 나는 분야도 있고 하니까 이득 보는 분야에서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이 이 무역으로 인해서 누가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이 법 적용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무역이득공유제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 이런 것을 지금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현재 3%인데 이것도 1%로 인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3%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자금이 대략 한 2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1%가 3% 이상입니다. 3%가 한 7조 1000억 정도 되고, 4%짜리도 몇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자금의 금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농업 분야의 자금 투자를, 민간 분야의 투자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면 투자가 저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좀 인하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예, 본 의원도 FTA 체결에 따라서 그 이익을 공유하자,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에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하면 농업 분야의 손해 보는 부분의 보상,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농업을 대표하는, 농민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리고 금리 문제도 농가 부채가 지금 가구당 2736만 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김태환 의원** 이렇게 평균 부채가 있는데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도 내리고 했으니까 이런 농업정책금융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을지 장관이 철저하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실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농업계에서는 이번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이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말 구조 개혁을 하고, 우리 농업을 대규모 들녘경영체로 또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력을 다해서 이번 기회를,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환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 인상되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인상 이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분기 중에 4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환 의원** 건강 증진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마는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실책을 한 가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인상된 2000원에는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세, 지방세 합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국세, 지방세 합쳐가지고 3318원이 됩니다. 4500원 정도 해 가지고……

○**김태환 의원**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1768원이 되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2000원이 가격 인상됐습니다마는 2000원 중에는 거의 세금이 1770……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68원입니다.

○**김태환 의원** 약 그렇게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맞지요?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인상된 2000원 중에 1776원이라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1768원입니다.

○**김태환 의원** 1768원은, 제 계산은 1773원입니다마는 68원은 국고로 들어가야지 제조사나 유통업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품은 가격 인상이 있을 때 유통단계별로 일시적으로 채고 차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김태환 의원** 아니, 그게 세금이니까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야지 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것은 동의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판매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마는 제조 날짜가 작년 9월로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그리고 시중에는 작년에 생산된 담배들이 아직

도 유통되고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차관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일부 재고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종합금연 대책을 통해서 2000원 인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도 담배사업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담뱃세 인상 발표 직후에 바로 매점매석 고시를 발표해서 부당이득 차단 여지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반출량도 104%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서 3대 메이저 편의점 유통업체 담배 재고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인상 전 8월에 비해 가지고 작년 9월 말 재고가 회사에 따라서 적게는 82% 또 많게는 421%까지 증가합니다. 또 연말이 돼서 담배 품귀 현상이 나오니까 기재부가 12월 16일 날 담배 무제한으로 팔아라, 104%가 아니고 추가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를,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좌관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표적인 3개 유통업체에서 정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말 재고보다도 10.5% 늘어난 작년 12월 말에 3580만 갑을 재고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모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담배사업자, 특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안전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안전 재고는 영업상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대폭적인 인상이 있다면 재고 관리 감독을 해서 가능한 한 많이, 많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12월 말까지 인상 전에 출고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담뱃세 인상 발표 직후에 바로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강제수단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태환 의원 강제수단은 없지만 행정지도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고시도 발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다른 것은 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실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매점매석 고시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제조사는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냐 했더니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영업 비밀이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제조사는 반출과 세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반출하면 세금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전부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창고나 자기들 지사나 이런 물류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금년에 팔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자기들이 통상재고로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차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다면 약 한 달분이 일반적인 재고라고 합니다, 통상재고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태환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한 달분이, 작년 인상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매출이 일어났다 하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의원 KT&G라든가 필립모리스라든가

수입 판매, 수입 제조사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한 달분으로 계산하니 약 6000억입니다, 그 세금 1768원이. 약 6000억이 제조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관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정법 위반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당이득이지 않습니까? 이걸 추징이 안 된다면, 추징할 수 있으면 추징해야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로 가지 않고 자기 주머니, 업자 주머니로 들어갔다 하면 국민들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실정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추징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또 추징마저 안 된다면 사회 환원이라도 반드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 맥락에서 아마 4월 14일 날 KT&G가 앞으로 4년간 3300억 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환 의원 그건 통상적으로 매년 사회공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보태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차관이 직접 챙겨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제조업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통업계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태환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갑 출신 국회의원 이미경입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입니다. 총리를 비

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또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주체인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실무 구성과 공무원 파견등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영령들과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책은 확실한 진상규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곧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하루가 지나면 들통이 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신가 하는 점을 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012년에는 투병 중이라서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13일 날 대정부질문에 답변했는데 바로 충남 천안 유세 연설 12월 7일 날 한 유튜브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유세장에는 갔지만 선거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너무 궁핍한 답변이지요. 선거운동하는 것하고 유세장 간 것하고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단돈 만 원도 안 받았다, 후원금 한 푼도 성완중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 원 주고 왔다,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완중 전 의원하고는 2007년, 2008년 송사를 해서 2년 동안 상당히 험한 관계에 있어서 별로 친하지 않았다, 별로 만난 적도 그다지 없다, 국회의원 된 이후에 만났을 뿐이다, 이랬는데 성완중 다이어리에서는 이완구 총리 이름이 스물세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하루가 지나면 거짓임이 드러나는 이런 답변을 국회에서 하고 계신 것은 바로 국회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조금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요새는 신문 열심히 보시겠지요. 경향신문 오늘 아침 자 신문 보셨습니까? 일면 톱 보셨지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아까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한 푼도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오늘 경향신문에서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후보 등록 날입니다. 그 첫날 오후 4시경에 성완중 전 의원이 부여 이 총리의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서 현금 3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2013년 4월 4일은 제가 국회의원 첫 등록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2013년 4월 4일은 제가 도지사 재직 시에 추진했던 충청남도 도청 준공식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옮겨 간 그 준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 반까지 행사가 있었고요. 마침 홍성은 제 전 지역구였습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홍성에 지인들이 많이 살고 도지사를 2009년도에 사퇴한 연후에 4년 만에 제가 처음 가 보는 도청이기 때문에 많은 옛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부여로 도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말씀 올린대로 그날 첫 등록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과 한 사오십 평 되는 사무실에 많은 지인들이 와서 축하도 해 주고 또 취재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개소식하는 날이나 첫 등록하는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누가 오셨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그때 상황은 입추의 여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성완중 전 회장하고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미경 의원 기억이 전혀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 특별한 날이 아니면 모를까, 마침 말씀 올린대로 여러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이미경 의원 기억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안 만난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것을 기억이 없는 것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건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린대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이걸 국회의원을 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해 본 사람은?

○이미경 의원 그런데 지금 비타500 박스에 돈을 넣어서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이미경 의원 돈을 3000만 원을 독대해서 전달했다, 이러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요? 돈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전혀 없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니까 돈을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

○국무총리 이완구 돈을 받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 누가누가 왔는지를 그 입추의 여지 없는 사람속에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미경 의원 돈을 줬으면, 돈을 줬으면 기억이 나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장내 소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이 돈을 줬다 하는 것이 지금 또 거짓말이라고 또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 다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미경 의원 하나하나가 지금 다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또 거짓임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이미경 의원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물러나겠다, 또 심지어 어제는 그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생각 끝에 이 의정 단상에서 국

민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 발언은 어떤 경우를 봐도 제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의 의지의 표현이지 결코 그냥 단순하게 말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경 의원** 성완중 전 회장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목숨을 내건 거,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 그 표현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만큼 저에게는 절박한……

○**이미경 의원**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도 그런 말, 지금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말 쉽사리 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두 번째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야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성완중 고인과 만남과 통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정말 억울함이 있었다면 그분이 억울하게 당하실 분이 아니지요.

따라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까마는 저도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를 했습니다. 또 여러 분들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경 의원** 자, 지금 성완중 전 회장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원이 되어서 몇 차례 그냥 공식적으로 만났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보궐선거로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이 돼 가지고 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1년 이삼 개월, 1년여 동안 동향 국회의원으로 만나 겹칩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국무총리 이완구** 한 말씀만……

그런데 원내대표가 되면서 본인의 선거법 문제하고 또 작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5월 6월 7월까지도 원내대표이자 우리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결정하는 그런 자

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서산·태안의 공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선거법 문제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1.2~1.3회 정도로 만났는데……

의원님들, 동료 의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 또는 1.5회 만나는 것은 같은 소속 당인데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어제 JTBC 뉴스에서는 이완구 총리가 지난 20개월 동안 23번 성완중 전 회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완중 리스트에 거론된 여덟 명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같은 동향 출신이고 제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밥도 안 먹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밥도 먹고 의원회관도 찾아 오셨고……

○**이미경 의원**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공식적인……

○**이미경 의원** 두 사람이서는 안 만났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공식적인 말씀을 듣고 있을 뿐이지 개인적인 속내는, 저는 사실 이분이……

○**이미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개인적으로 만났다고요.

○**이미경 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은 없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밥을…… 글쎄,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원내대표가 150명의 국회의원을 뵙는데 그거 다 일일이, 아침·점심·저녁을 수도 없이 원내대표 자리 하는데……

○**이미경 의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서 밥을 먹는 일은 그렇게 뭐……

한 번 두 번, 이것은 생각 안 날 수 있지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성완중 회장과……

○**이미경 의원** 지금 두 사람이 친하지도 않는데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동료 의원들이 잘 압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미경 의원** 예,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이분과 개인적으로 속

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경 의원** 아니,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느냐고요, 밥 먹으면서?

○**국무총리 이완구**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니까 만나지요.

○**이미경 의원** 아까는 의원이니까 공식적인 회의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공식적인 회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고향, 같은 국회의원, 같은 당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꼴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경 의원** 그 얘기는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제가 JTBC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회관에서 그리고 귀빈식당에서 열세 번 만나고 그리고 호텔식당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귀빈식당에서요?

○**이미경 의원** 예, 귀빈식당에서 열 번 만났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우리 국회 귀빈식당이요?

○**이미경 의원** 예, 그렇지요.

열 번은 렉싱턴호텔, 63빌딩 또 플라자호텔, 백원, 렉싱턴호텔 양식당 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이미경 의원** 거기에서는 회의했습니까, 안 그러면 단들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몇 번 없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귀빈식당에서 만나는 것은 의원이니까……

○**이미경 의원** 아니, 귀빈식당은 그래서 의원회관하고 제가 똑같이 취급했다니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이 렉싱턴……

○**이미경 의원** 호텔 그리고 고급식당 이런 데서 누구하고…… 단들이 만났느냐 물었는데 단들이 만난 건 생각이 안 난다 그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단들이 만난 적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친하지도 않은데?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원내대표나 같은 동료 의원이 어떻게 안 만나겠습니까?

○**이미경 의원** 그래서 이것 역시 매우 친하지 않은데 의원이 되어서 회의에서 만난 것 가지고 별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친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무

리 동료 의원이라도 사사롭게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고인과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를 나눌 처지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진실을!」 하는 의원 있음)

그 말씀은 이 자리의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같은 의원님들끼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완중 의원님과 개인적인 얘기는 않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분이 3월 22일 날, 그러니까 3월 12일 날 총리 담화가 있고 3월 18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3월 22일 날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다. 3월 22일에 전화를 주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그런 것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한테 전화를 줄 때까지 한 번도 그 후에 저한테 전화가 없습니다. 만약 저하고 정말 그렇게 친했다면, 동료 의원으로서 숙내를 드리냈다면 3월 22일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15~16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왜 전화 안 했겠습니까?

○**이미경 의원** 총리, 어쨌든 이틀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참 말 많이 바꾼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말 바꾼 것 없고요.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료 의원이라는 점을 자꾸 간과하니까……

여러분,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국회에서 얼마든지 만나지 않습니까?

○**이미경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유리한 것만 기억하시고 불리한 것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좀 있어요, 초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처음에 보여 드렸던 대로 너무나 여러 차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들에게 열다섯 번이나 전화했고 그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전화해서 내가 총리다, 혈액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총리인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

해라, 그걸 굉장히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미경 의원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그제인가 MBN 8시 뉴스를 보면 제가 전화를 드렸던 분이 저하고 도지사 때 가까운 분입니다.

○이미경 의원 예, 그 얘기 계속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화드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분 말씀에……

○이미경 의원 그것은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인터뷰 그 쿼트(quote)를 보면……

○이미경 의원 그 사람이 강압적으로 느꼈다면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 온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 말씀입니다.

○이미경 의원 이 성완중 게이트는 현직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 그리고 현직 국무총리, 현직 도지사, 친박계로 불리는 여당 실세 의원이 한꺼번에 검은 돈에 연루된 전대미문의 권력 게이트예요.

이 상태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러니까 총리는 이것을 떳떳하게 제대로 되게 하려면 사퇴하시고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인과 친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왔고.

사실은 그러한 연유로 해서 함께 동료 의원들에게도 가끔 제가 조언을 합니다. ‘가능한 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향 출신으로……

○이미경 의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마는 대단

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모든 것이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미경 의원 이렇게 이 수사가 제대로 될지 하는 것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발언을 지금 하셨는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지금……

○이미경 의원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실, 비서실장, 이렇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는가 걱정이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켜보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께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보장을 약속하고 이분들이 사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경 의원 의논 안 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 말씀은 답변을 제가……

(「수사 대상이 수사 보고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미경 의원 아니, 이렇게 심각하게 걸려 있는 문제인데 대통령이 걱정되어서 물어보지 않았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경 의원 저는 오늘 준비한 경제 관련 대정부질문을 총리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완구 총리는 국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고 또 질문해도 답변을 준비해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자리를 그냥 보전하고 있는,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있는 총리에게 무슨 답을 구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리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 말씀만 하고 들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부탁컨대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유권자가 있습니다. 저도 선출직 국회의원입니다, 총리 이전에.

따라서 고인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

지만 이름이 거명되고 또 본인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기정 사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소 격한 표현이지만, 저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인간 이완구로서는 대단한 얘기이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한 것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가 될 것이고 또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의원 예, 돌아가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총리 말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거짓말만 해!」 하는 의원 있음)

○이미경 의원 국토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미친 전셋값’ 이런 말 들어 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들어 봤습니다.

○이미경 의원 정말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셋값 잡아야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생경제 1호 법안으로 5%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대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법안을 제출해 놓고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3년이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반시장적이라는 표현 보다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계약갱신청구권도 반시장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같이 가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렇지요. 같이 가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둘을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같이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은 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경 의원 전셋값은 ‘미친 전셋값’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야당이 3년 동안 내 주장하고 있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가 두려운 겁니까? 어떤 부작용이 두려운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과거에 보면 실제로 처음 전월세 상한제가…… 계약갱신 청구가 2년으로 처음 올라갔을 때 사실 오히려 전세가가 급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가격규제가 사실 공급을, 즉 전세나 월세 공급에는 역시 좋지 않은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과거에 어떤 부작용이 났는지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1989년 12월 31일 날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임대차기간 연장이 도입이 됐는데 1990년에 전세가격 급등이 16.8%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1·2·3·4, 4개월 동안에 그 대부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9년, 이게 시작이 되기 전인데도 17.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종의 공표효과 같은 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만약에 비슷하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급격한, 오히려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과거의 사례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무조건 안 하겠다고 생각하니 같은 통계를 보고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경 의원 안 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니 같은 통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87년부터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87년도에 17% 올랐

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는데, 저기 통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89년에는 무려 21.7%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래서 89년 12월 달에 1년 계약 갱신 더 연장하는 것……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때는 1년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더 계약갱신 연장하는 걸 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89년도에 21.7% 오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90년 1·2·3월 달은 반짝 올랐습니다. 그런데 90년 말에 가서는 평균이 16.2%가 되고 91년도에는 3.9% 오르고 92년도에는 7.8% 올랐습니다. 안정적으로 돼 나갔어요. 그리고 1년밖에 사는 것을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2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5년이 지났어요, 2년 살 수 있는 걸 보장받은 지가. 그러면 다시 2년 플러스 2년 더 하자 하는 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89년 이 통계 만들고 계속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지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날마다 89년 이 통계를 들고 나와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통계만 인용을 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경 의원 그 통계 이제 그만 우려먹으세요, 엉터리 통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엉터리 통계는 아니지요.

○이미경 의원 엉터리 통계를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 해석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전에 전세가가 87년, 88년에 올랐던 것은 사실은 주택 부족에 기인한 바가 큼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주택 200만 호 건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1990년에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안정이 된 것도 상당히 공급의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오히려 정상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미경 의원 내려왔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런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정책 당국으로서는 사실…… 그때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기……

○이미경 의원 지금도 전셋값 때문에 자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그것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 대책이, 과거에 일단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대책을 또다시 하는 것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경 의원 잘못된 통계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미경 의원 다른 선진국들 우리가 가끔 많이 인용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이미경 의원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하고 있고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이미경 의원 프랑스, 독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요 근자에 불란서 그리고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면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왜 이것만은 굳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다른 선진국들과 저희들의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특정한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이것이 완화되는 추세이고요. 또 거기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이고요. 또 일본의 경우는 오히려 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영국도 이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이미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국한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그 국한된 사용도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곧 환경과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의원** 그렇지요. 다른 대도시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권을 줘서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다시 하고요.

이 주택정책에 대해서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임대차에 대한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더욱더 나와야 됩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저희들이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주택임대차 정책의 근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임대료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서민들의 급격한 전월세 임대료 상승은 고통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은 지금도 저희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욱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경 의원** 그 정책이 실패해서 지금 미친 전셋값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주택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km로 달려가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정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km로 따라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경을 더욱더 쓰고, 전월세 대책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서민·중산층 이분들이 급격히 전셋값의 상승이 되는 부분과 또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더욱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석현** 이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 출신의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참사가 있는 지 꼭 1년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날을 잊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으로서 반성을 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그야말로 고 성완중 리스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것이 함몰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찰 수사로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켜보고 그래도 차분히 또……

우리가 오늘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경제 회복이라든지 청년실업난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도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정에 좀 전념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柳在仲 議員** 총리님,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정책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인구정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 오늘 일본이 겪고 있는, 우리보다 이삼십년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일본이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이 돼서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3, 4년 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면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전체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경제성장이라든지 국가경쟁력도 암울합니다, 미래에 봤을 때. 그래서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인데 사회 분야로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제가 경제적인 시각에서 언급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여러 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저출산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몇백 년 후에는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어떤 전망, 경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을 하고 지금 5년마다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합니다마는 정말로 심도 있게, 정말 심각성을 국민이 인식해 가면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柳在仲 議員** 총리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추진된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10조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합니다마는 별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柳在仲 議員** 아닙니다. 10년간에 약 66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1명으로 10년 전 1.08명에 비해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정책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어떤 미미한 전실행정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젊은 부부들에게 면역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몇 번이나 열렸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柳在仲 議員** 그러시지요, 총리님. 이 문제가 2년에 한 번 개최될 정도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우선 어떻게 보면 현안이라든지 당장에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우선시할 수도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미래에 봤을 때는 이 저출산 문제가, 모든 것이 거기에 귀착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도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출산 문제의 주관 부처를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 두어 왔습니다만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좀 맡아야 되지 않느냐, 기재부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쥐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과거 우리 4대강 사업도 그렇고 SOC 사업, 정말 당장에 4대강 사업도 수십 조가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예산을 미래의 어떤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예산을 편성했다라면 이 출산율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또 젊은 부부들이 생각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이를 더 낳자, 더 낳으니까 많은 혜택이 있다, 옆에서 권장했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많이 예산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총리님, 화면을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200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의 경제효과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 1명이 태어나면 평생 12억 원의 경제효과와 1.15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기준이 1.3명에 진입하기 직전인 2000년 출산율은 1.4명에 그쳐 신생 수는 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43만 명에, 딱 20만 명이 차이가 납니다. 경제효과를 제가 분석해 보면 240조 또 고용효과로 보면 23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런 저출산 정책이 개선이 되었다면 이런 240조와 10년간 23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서.

그래서 지난 10년간 매년 우리는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비슷한 규모로 경제와 고용효과를 잃어 왔고 지금 이대로라면 더 많은 효과를 잃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리님께서 좀 직접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在仲 議員** 또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재정뿐 아니라 전

반적으로 여러 가지 출산으로 인해서 법·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든지 사기업이든지. 이런 데 한번 챙겨 보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라고 하면서도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근속연수가 부족해서 승진에 누락되는 이런 것을 알게 모르게 제도적으로 규제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훗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초를 낳았다는 국무총리로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개혁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在仲 議員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꼭 명심해서……

○국무총리 이완구 명심하겠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렇게 정책을 좀 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고, 기재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기재부총리가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차관님 나오셨는데, 산적한 우리 경제 현안을 챙기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4/4분기까지 좀 부진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가지고 자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실물지표들도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렇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총리께 질문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요즘 청년세대를 우리가 3포 세대라고 부르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3포 세대라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취업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미래 전망이 잘 안 보여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柳在仲 議員 2013년 12월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그렇지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미진하기는 하지만 조금조금씩 개선 조짐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在仲 議員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청년실업률은 통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에 월별 최고인 11.1%를 기록했고 또 2014년 평균 9%로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취업난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수요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한다든가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을 통해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든가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든가 현장 중심의 대학 교육이 되도록 산학협력대학이라든가 정원 선도대학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柳在仲 議員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구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못하면 젊은층의 부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출산율도 개선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변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성장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마 전에 경제단체 고위 간부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5년 동결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노동시장 대타협 과정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상위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기업이 추가로 기여를 하고 또 정부도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세대 상생형의, 청년하고 장년 간에 세대

상생형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노사정협의회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해야 되지는 않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실제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지금 비록 한노총이 결렬 선언을 내서 그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지향하고, 다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런 만큼 나오되는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크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갔던 사람들, 중소기업 갔던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출생하지 못하는 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적인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의 노동시장 개혁에서도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더불어 활성화라고 할까요, 유연성 파트도 조금 개선될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柳在仲 議員** 지역에 다녀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柳在仲 議員** 그런 점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된다면 인구절벽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따라가기 싫은 일본의 뒤를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차관께서는 경제정책을 오래 하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실업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많겠습니다만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게 전력투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반갑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서울 하늘을 보면, 매연과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그 하늘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柳在仲 議員** 어떻게 보면 환경부 소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환경 문제를 떠나서 수도권 과밀화가 원인이 아니냐……

(영상자료를 보며)

또 최근 발생한 이런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대개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화면의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난 1월 초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발표한 서울의 초미세먼지의 원인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의 절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둘 때는 우리 서울시민들, 수도권의 국민들의 어떤 건강에 크게 해를 줄 것 같은데 이걸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柳在仲 議員**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로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더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우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어쨌든 그것을 줄이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주로 환경부가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수도권 과밀화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이미 추진되고 있던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 예를 들면 세종시를 건설한다든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당연히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고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수도권 규제를 논의하게 되는 데는 오

히려 수도권이 조금 역차별받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수도권의 과밀화를 그야말로 부추킨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柳在仲 議員** 장관님,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을 좀 분산할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에 한 외국의 예를, 선진 외국의 예를 들면 화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기업의 지방 이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업이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해 투자한 금액의 최대 7%까지 법인세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 고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의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졸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가까운 선진국 예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지방의 고용 확대와 경제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柳在仲 議員** 이제는 선진국도 보면요, 본사를 지방 중소도시로 옮기는 것이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수도권, 수도권이에요.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서 과감하게 분산시켜 갖고 국가균형발전이 미래의 우리 국가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그런 길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야 돼요. 지역의 어떤……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하는 데에 지방발전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본 의원도 이 국회도 세종시 근처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옮겨서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도권의 인구분산 정책에서도 우리 국회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

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과밀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회가 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국토교통부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부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던 시책이 내실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柳在仲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부와 우리 정치권은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겠습지만, 현안 문제 해결도 중요하겠습지만 국가 미래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과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유재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부의장 정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입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 구절처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에게 4월은 늘 잔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 4월이면 어김없이 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첫해에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선거 때의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만은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올해는 고 성완

종 전 회장 파문으로 인해 이 정권이 능력은 없어도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국민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국 박근혜정부 3년은 끊임없는 신뢰 붕괴의 3년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린 박근혜정부, 그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정부의 리더십이 상실된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국민들은 가장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본인에게 4월이 잔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국의 총리로서 신뢰를 붕괴시킨 정부 때문에 잔인한 4월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사죄는커녕 본인이 안쓰럽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신보다 국민의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총리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잔인한 4월에 절규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앞서 이미경 의원 질의에 고 성완중 회장에게서 단돈 만 원도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 2012년 1월에 19대 총선 앞두고 개최한 흥성 출판기념회에 고 성완중 회장 참석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나란히 계신 것 보입니다.

참석한 것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2012년 1월 5일, 1월 6일, 1월 9일, 대전·흥성·청양 세 곳에서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김영주 의원 제가 사진 보여 드렸는데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물론 봤습니다마는……

○김영주 의원 그러면 참석하신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요.

○김영주 의원 그때 고 성완중 회장으로부터 돈을 안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김영주 의원 책값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책값이 1만 원이니까요.

그 함을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또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 제가 그때 현역 의원……

○김영주 의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영주 의원 총리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순탄치 못한 과정을 거쳐 겨우 임명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성완중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미경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민병주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암 투병 중이라 유세장에 한두 번 간 적은 있으나 유세는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두세 번 유세장에 갔다고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유세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렇게 답변 안 했지요.

○김영주 의원 답변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속기록을 저도 봤습니다.

제가 ‘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유세장에 한두 번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김영주 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그 사진이 병색이 완전한 사진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에서만 세 차례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리는 ‘성완중 전 회장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인간적 관계를 토로할 정도의 관계는 아닙니다.

○김영주 의원 어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완중 다이어리'에 의원 재직 시절부터 지난달 까지 20개월간 총리의 이름이 스물세 번이 등장 합니다.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많이 만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하지요. 같은 소속 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충청도 의원인데 어떻게 국회에서 안 만납니까? 더군다나 제가 원내대표입니다.

○김영주 의원 국회에서 만나지 않고 호텔에서 도 만나고, 두 번……

○국무총리 이완구 호텔이 됐든 귀빈식당에서, 보니까 열두 번에…… 호텔에서, 이 근처에서 밥을 먹고 했다는데 저 같은 충청도 국회의원이끼리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1년 이삼 개월 동안에……

○김영주 의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라고 일 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소속 당 의원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총리,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 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영주 의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사퇴했습 니다.

총리는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최소한의 도덕성 을 지금도 상실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큰 국가 적 혼란을 막고 진실 규명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건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영주 의원 그러나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 다.

총리뿐만 아닙니다. 이번 부패 스캔들에 연루 된 분들 모두 국가를 이끌고 있는 현 정권의 실 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 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신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총리께서 이런 부패 스캔들에 빠진 것에 대해 서 국민들께 사과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

를 막론하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실제적 진실이 뭔가를 밝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 않는 건 아닙니다. 대단히 송구스럽 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무엇이나를 지 금 밝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또 김 의원님, 저하고도 여러 번 국회에서 당 이 다르지만 뵙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김영주 의원 저는요, 총리님, 강한 부정은…… 그다음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의원님과 당은 다르지만 대단히 가깝게 지 낸 사이입니다, 의원님. 몇 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영주 의원 저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만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김영주 의원 총리, 저는요, 그래도 가까운데 저랑 한 번도 식사 안 하셨습니다. 가깝지 않은 성완중 회장하고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도 성완중 의원과 식사를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원 들끼리 만나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 의원 성완중 회장하고는 스물두 번 만 나셨는데 가까운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 다.

오직,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실세들이 지금의 난파선에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탈출할 생각만 하고 발뺌하기에 급 급했습니다. 단지 립 서비스라도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 의원 승객 구조는 하지 않고 침몰하는 배를 뒤로 하고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딱 1년 전 세월호 승무원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염려하시는 마음 충 분히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대선공약 파기, 세월호 사 건, 고 성완중 전 회장 파문 등이 우리 사회에 미친 가장 큰 재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신뢰의 붕괴라고 생각합니 다.

○김영주 의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를 살리기 위해 매진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번번

이 신뢰를 붕괴시켜 경제 회복의 새싹을 싹둑 잘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인 신뢰와 경제성장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의 수많은 연구는 한결같이 신뢰가 증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높아지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은 한계에 직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상승시키는 핵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를 야기한 당사자이자 더욱이 앞서 국민에게 사과하지도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틀 속의 말씀 동의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게 심려의 마음을 드린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더욱이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는 부패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총리입니다.

총리, 이러한 차원에서든 사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거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회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총리가 만약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의 반대의 경우라면 그 또한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실제적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총리, 국민은 거짓말 총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 받은 사실은 검찰에서 밝혀졌지만 계속된 거짓말 그 자체만으로도 물러나야 합니다.

총리께서 요즘에 총리에 대한 시중 여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박 대통령, 수사 대상 1호 총리에 직무대행 맡길 수 있나’, ‘제 발등 찍은 사정, 이 총리 취임 두 달 만에 식물 총리’, ‘이완구 총리의 처신 부적절했다’, ‘열다섯 번 전화 공세에 거짓말까지, 이완구 총리 수상하다’, ‘이완구, 총리직 물러나 수사받아야’ 이게 언론에 보도된 일부 국민들의…… 이것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은 국가에 누를 끼칠 뿐이라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의원 여러분.

저도 동료 의원이자 총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물론 기억의 착오는 좀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결코 저거 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짓말, 거짓말 하는데 제가 거짓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소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틀 속에서는 줄기가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이시지요?

‘성완중과 19대 전에는 친분이 없었다’, ‘2013년 재선 때 봤을 수는 있다’ 그랬는데 스물세 번 만난 거 나오니까 또 인정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같은 동료 의원으로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사실 관계를 좀 착각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하기 전에는 성완중 회장님을 만난 기억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자료가 나오겠지요, 수사하다 보면. 왜냐하면 2013년 4월 보궐선거 전에 그분의…… 이제 압수 수색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김영주 의원 총리!

○국무총리 이완구 그다음에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겁니다. 그거를 만났다 하면 곤란하지요.

○김영주 의원 총리,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영주 의원 앞서 오전에 이미경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전혀, 후원회에 왔을 때도 생각이 안 난다. 만난 적도 생각이 안 난다’, ‘스물세 번 만난 것도 생각이 안 난다’ 하는데 또 후원회 장소는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당신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기억만 하고 계신다고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미경 의원 질문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

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고인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루된 여덟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인들을 소환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예컨대 본인이 회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횡령하고 배임을 했는지 또는 어떤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어떤 돈으로 돈을 쫓는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후원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쫓는지 어떤 국회의원을 쫓는지 나올 것이고요.

또 사업을 오래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업과 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래 그러한 면모가,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영주 의원** 어떠한 변명도 총리의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들께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총리직을 내려놓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고 미래를 생각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야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망 강화, 경기부양책 반대 등에서 8년 만에 교집합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들께 보여 드림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집합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정권의 부패사건이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폭증하고 있는 이때 정부의 말을 누가 믿겠으며, 누가 따르겠습니까?

기재부차관 나오십시오.

오늘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 경기침체,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세대란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더군다나 고 성완중 회장 과문으로 총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총리가 없으면 당연히 부총리가 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사안별로……

○**김영주 의원** 사안별리가 아니라 총리가 없으면 누가 대행합니까? 부총리가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경제부처의 수장인 경제부총리, 오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국제회의 핑계로 경제부

처 수장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했습니다. 충분히 차관이 대신 해도 될 나흘간 하는 회의에 첫날 참석하지 않아도 될 국제회의라고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의원님……

○**김영주 의원** 그것도 야당 대표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막무가내로 출국했습니다. 참으로 엉망이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차관, 합의정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께서 요구한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구상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세금하고 복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등 세입 기반 확충,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복지수준, 국민부담,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국회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 ‘증세는 안 했다’, ‘법인세 정상화는 못 한다’, ‘복지는 축소해야 한다’, 기존 정부 입장을 유지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들께 해야 될 도리는 경제를 먼저 활성화시켜 가지고 세수를 최대한 확보해 보고요.

그다음에 세입 기반 확충이라든가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추진하고, 그리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적정한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께 여쭙 보고 또 거기에 걸맞은 국민 부담 수준이 어떤지, 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데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시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 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이론적으로는 참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로 그게 다 정상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부가 치명적인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

말정산 파동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정부 쪽에서 충분히 세 부담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파동이 나온 겁니다.

세금을 올릴 때 가진 자가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내팽개치고 세금 걷기 가장 손쉬운 대상인 봉급생활자 지급 탈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잘못된 세금정책으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계층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제일 먼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앞으로 금리변동 위험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빚은 갚아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상환 의무 특성상 일정 소득 수준이 있는, 일정 소득이 되는 차주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었고요.

○**김영주 의원** 그러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기존 대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영주 의원**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안은 서민금융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대출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은,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희가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아까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가지고 변동,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그다음에 분할상환 대출로 바꾼다든가 또 상호금융권 같은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민들 또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 계층들에 대해서 취약 차주별로 거기에 걸맞은 금융지원 대책을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살려 가지고 가계소득을 늘려서 상환 능력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금 차관님 말씀은 내수경제 살리기 효과를 위해 결국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말씀하시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저희가 부채를 이렇게 늘린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될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김영주 의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게 옛날에 했던 대책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라든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보금자리론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서민층 대상으로는 저리 자금 공급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구요.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채무 재조정하는 작업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성 있는 맞춤형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지금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계기관들이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어떤가 한번 현장에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김영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신안산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사실 계획이 원래 나

온 것이 참 오래되고 그런데 아직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게 지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저희 국토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올해 5월까지는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기재부와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전의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지하철 건설에서도 대중교통의 확충이 긴요한 낙후된 지역, 서민 밀집지역에 우선되어야 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순위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을 위해 1998년에 추진되었던 신분당선과 신안산선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성남, 용인, 수원 의 GRDP는 2011년 신분당선 개통 당시 63조 원으로 신안산선 예정 노선인 안산, 시흥, 광명의 GRDP 29조 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부자동네에 먼저 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부자동네라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신분당선이 먼저 된 것은 맞습니다.

○**김영주 의원**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산, 시흥, 광명을 운행할 신안산선은 아직도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새누리당에서 영등포 지역에 붙인 플래카드입니다, “신안산선 착공!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착공을 13년째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신안산선 착공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표를 얻고자 새누리당이 주민까지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글썸, 제가 현수막을 지금 봤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김영주 의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5월 말까지? 타당성조사가 안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아직 결론 안 나

왔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에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흥·광명·금천·영등포 주민들, 역세권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물론 너무 오래 끈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민자 적격성 검토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장관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당성조사만 세 번 한, 건설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세 번이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제가 아직 그런 사례가 다른 데가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래 걸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영주 의원** 서울 서남권과 경기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신안산선 조기 착공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예, 하여튼 이게 검토가 끝나면 어떻게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지금까지 과오는 국민들에게 무척 잔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한 지 3년입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살게 해 달라고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정권의 부패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무능 때문에 절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호소와 절규에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덕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기장갑 출신의 배덕광 의원입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196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50불이었습니다. 당시 월급으로 5000원을 받던 저의 꿈은 국가발전의 이바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그 시절의 약 190배 되는 2만 8000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대한민국, 창조경제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3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 나아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 나가야 할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마음이 아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답답합니다.

○배덕광 의원 건강 잘 챙기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배덕광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경제는 심리'라고 했는데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배덕광 의원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경제가……

○배덕광 의원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3월 달, 그러니까 2014년도 4/4분기 경제성장이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대컨대 최소한 1% 정도로 기대를 했는데 2014년 4/4분기가 너무나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2015년도 금년도 1/4분기에는 좀 올라가지 않았

졌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함께 약간의 아마 각종 통계지표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경제가 회복하는 그런 기미가 뚜렷이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덕광 의원 저는 그러면 이제 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은 경제보다 더 크고 엄중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배덕광 의원 그런데 안전의 심리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덕광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전광판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인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 열에 아홉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 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약 20%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는 각종 법령을 정비한다거나 또 조직을 개편해서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국민들 기대치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또 국민들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배덕광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재까지 저희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현재 23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고리 1호는 1차 10년 연장이 됐고 2차 연장이 돼서 이제 8년 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상황을 보면 아직은 지표상으로는 여러 가지 불 때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장에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총리께서는 지난 1월 총리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과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심정은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배덕광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원전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배덕광 의원**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고리 1호기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폐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전성, 수용성, 필요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첫째, 고리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노후된 원전입니다. 1978년 가동된 이래 30년의 설계수명을 끝내고 지금 38년째 힘겹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리 1호기는 사고가 많습니다. 690건의 사고 가운데 고리 1호기에서만 130여 차례, 전체의 약 20%의 사고가 발생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이버공격을 받아서 대외비인 원전 도면과 직원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해커들의 집중 공격은 바로 고리 1호기였습니다.

총리님, 고리 1호기가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많다면 안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정부의 현재 입장은……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전력수급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0.5~0.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안전을 정부의 국가경쟁력 제1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폐로사업은, 폐로산업과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입니다마는 앞으로 폐로산업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 말씀대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대단히 경청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 올린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

는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원전 안전 심사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맞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배덕광 의원** 만약 국민들이 가장 노후되고 사고 많은 고리 1호기를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원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히 원안위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경청을 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덕광 의원** 세월호 참사 후에 우리 국민들이 고리 1호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 가동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말씀 올린 대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제1 정부 판단의 기준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측면에 신경을 써 가면서 국민 여론을 경청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국민의 뜻을 담지 못한 정책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고리 1호기 폐로를 주장하고 있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리 1호기가 재연장 된다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명약관화합니다. 고리 1호기는 국가발전의 주춧돌이 아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고리 1호기는 전력수급에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리 1호기 비중은 전체 원전의 2.8%에 불과합니다. 지금 바로 해체해도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한수원 보고서에 저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수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보고서의 결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급 단계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수급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배덕광 의원** 총리님, 얼마 전 월성 1호기 재연장이 승인되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덕광 의원** 그렇다면 전력수급 측면에서 고리 1호기는 더더욱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필요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전력수급 상황에서 그렇게 심대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배덕광 의원** 전력공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전력 수요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전의 전력 판매 증가율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KDI는 현재 3%대의 경제성장률이 2050년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지도 않는 전력에 귀중한 국민 세금을 쏟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이처럼 필요성·안전성·수용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고리 1호기를 재연장해서 구태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얼마 전 캐나다에서는 설계수명 30년이 다 된 원전이 지역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서 재가동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의 극심한 분쟁을 겪는 터키 다음으로 높습니다. 6·25 동안 때보다도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곧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제가 2009년도 12월 초에 충청남도 도지사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저의 결심을 갖게 한 동기가 바로 사회적 자본인 신뢰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이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느 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에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배덕광 의원** 그렇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총리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배덕광 의원** 저는 해운대구청장 시절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 증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장의 공동체를 넘어서 성숙의 공동체로 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총리님, 본 의원은 원전 갈등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지금 원안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원안위의 결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적 신뢰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덕광 의원** 원안위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서울에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국민들은 이 부분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원안위는 왜 원전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한복판에 있느냐, 경제의 불평등에 이어서 안전 불평등의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맞습니다.

○**배덕광 의원** 총리님, 건설 예정인 원전까지 포함해서 부산과 경북에 총 몇 기의 원전이 들어설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한 20여 기 정도, 구체적으로 ……

○**배덕광 의원** 26기입니다. 전체의 약 80%가 고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총리님,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한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고리 주변 30km에는 33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140여 명이 일하는 원안위는 400km나 떨어진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전광판을 한번 보시지요.

원안위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원안위의 전문성 제고, 지역의 생산·고용 증대’, 총리님 이 중에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전부 다 공감이 갑니다.

○**배덕광 의원** 얼마 전에 한 자치단체장이 장례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례 시설 옆에 관사를 지어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총리님, 엇그제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리 1호기를 세워서 5월을 ‘행복한 달’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배덕광 의원** 다음은 미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창조경제는 지금 노동 집약적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정책으로는 경제를 더 이상 성장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이것에 기반을 해서 좋은 일자리와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예,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 만들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라는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취임하시던 지난해 7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청년 실업률은 8.9%, 고용률은 42.2%가 되고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2월 달 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올해 2월에 발표된 수치는 청년 실업률은 11.1%, 고용률은 41.1%가 되고 있습니다.

○**배덕광 의원** 청년 실업률은 늘어나고 고용률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청년 창업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청년 창업을 따로 숫자로 인원수로 파악은 어렵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신설법인 수 중에서 청년층이 신설한 법인 수를 세어 보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난 3년간의 신설법인 수를 연간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예,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실업자 중에서 25~29세까지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지금 미래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ICT 사업들, 전광판을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등은 해운대구청장 시절 제가 직접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빅데이터로 해외 SNS를 분석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시책을 개발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는 정책이주지역을 중심으로 1인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드론은 해운대 장산의 산불 감시용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모두 전국 최초로 한 것들입니다.

장관님,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산업은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배덕광 의원**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한 이들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는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이것을 사업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산업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두고 각 부처와 연합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8%에 불과합니다. 또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업계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사이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창조경제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6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적으로 6위, 8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희망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드론이나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들은 지금까지 많은 규제들의 걸림돌이 있어서 산업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좋은 성과를 빨리 만들어 내고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덕광 의원** 장관님, 부산에 가면 밀면이 유명한데 한번 먹어 봤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밀면 맛있습니.

○**배덕광 의원** 맛있는 밀면도 불어터지면 맛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처럼 정책도 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복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침병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5년 전 홍남부두에서 1만 4000명의 피난민을 싣고 출발한 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빅토리'입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비록 오늘 대한민국호가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때의 빅토리호처럼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배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동두천 지역구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양주·동두천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낡은 성장 정책 기조를 일신하고 양극화된 우리 사회와 위기에 처한 민생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적폐의 핵심으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 소명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다가 언론에 증거 자료가 나오면 상황에 맞춰 말 바꾸기를 일삼는 총리의 답변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가볍게 보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각종 민생경제 현안을 놔두고 총리의 거짓말 검증에 위해 연일 사실 확인 차원의 질문을 해야 하는 본 의원의 마음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어제 언론에서 공개한 성완중 회장의 다이아리 보도 보셨지요? 성완중 회장의 다이아리 보도, 일정표 관련된 보도?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누가 작성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 누가 작성한지 모르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만약에 성완중 회장이 작성했다고 하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성완중 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어떤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성호 의원 그런데 총리를 포함해서 성 전 회장의 메모에 등장하는 8인 모두 성 회장과 개인의 만남과 자금수수 의혹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총리는 ‘19대 국회 당시 1년 동안 함께 의정생활 활동한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게 아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반면 총리는 지난번에 충남 태안 군의회 이용희·김진권 의원들에게 15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김진권 의원은 한 차례 정도 했을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 어쨌든 두 분 합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진권 의원은 한 번……

○정성호 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 전화한 것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친분 있는 분에게 전화를 안 드리는 게 더 이상 하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러면 성완중 회장하고 이용희·김진권 의원 그 두 분과는 누가 더 어떻게 친한 사이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호 의원 성 회장하고 친합니까, 두 군의원하고 친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하고의 관계 말입니까?

○정성호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것 어떻게 친하다는 것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이용희 군 의장님은 제가 도지사 때 안면도 꽃박람회 때 태안군 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도지사가 안면도 꽃박람회를 주관했거든요.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많이 만나서 군 의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관계고 김진권 의원은 잘 모르는 분이고 성완중 회장은 같은 국회의원으로 1년몇 개월 동안……

○정성호 의원 그런데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친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국무총리 이완구 누가요?

○정성호 의원 어쨌든 성 회장의 그 다이어리에 따르면 성 회장과 최근 1년 8개월 동안 23차례 만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국회의원 이후로……

○정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친분 있는 그 두 분, 이용희·김진권 의원 이 두 군의원들과는 한 1년 8개월 동안 몇 번 만나신 적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 전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성완중 의원과 그 두 군의원과 누가 친분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총리가 그래도 성완중 의원과 더 친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하고 성완중 의원하고요?

○정성호 의원 예, 군의원들보다는 더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군의원님들하고는, 성완중 의원님의 지역구 군의원들입니다, 그 두 분이.

○정성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군의원들 보다는 국회의원하고 더 친하겠지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완중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까지 이용희 군 의장님이나 김 의원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정성호 의원 아니, 총리가 군의원보다는 성완중 의원과 가까운 것이고, 이 두 군의원한테 친하다고 하면서 총리께서 전화하셔서 가지고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지금……

○정성호 의원 일단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사실 확인한 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의 공식 직무에 관련된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중앙일보에 ‘이완구를, 이완구를……’이라고 성완중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보니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새벽에도 전화할 수 있는, 아침 일찍에도 6시 한 50분인가요,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니까 ‘의장님 이 보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말한 부분인데……

○정성호 의원 그 내용은 답변하셨고요.

그게 총리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사안입니까, 아니면 총리실의 공식 직무에 관련된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야,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친분 있는 분한테 전화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연스럽고.

○정성호 의원 그게 공식 직무입니까, 개인적인 신상 관련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기사입니까?’……

○정성호 의원 그것은 총리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사안이고 총리의 지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다음에 총리가 만약 문무일 특별 수사팀에다가 사실 확인하자고 ‘너희가 지금 수사하고 언론……’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문무일 수사팀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건다고 하면 검찰이 압력으로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일단 만약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압력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성호 의원 국민들은 어쨌든 총리가 말 바꾸기를 하고 목숨을 걸겠다는 식의 진중하지 못한 그런 언행 때문에 만약 이게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 검찰에다가 수사상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총리가 수사를 받겠다고 하셨지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출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면 총리의 신분은 형사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피내사자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정성호 의원 경찰에 근무하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어떤 신분이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정성호 의원 상황이라도,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 내사자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것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 어쨌든 총리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

○정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것은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정성호 의원 어쨌든 간에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지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총리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그 위치에 있어서는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태안군 의장님한테 전화할 때는 이러한 얘기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때 전화를 드린 겁니다. 제 이름만 나왔을 때입니다.

○정성호 의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인들을 만나서 ‘성완중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 이완구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전에는 제가 성완중 회장과 말씀 올린 대로 도청의 송사 문제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이어리나 이런 게 나올 테니까요. 성완중 회장과……

○정성호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중이고 수사가 착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일일이 대응하고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 한다고 하면 검찰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언론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답변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아니, 국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일일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언론에 코멘트를 하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느

끼겠습니까, 그것을?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정치인으로서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또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참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난 13일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2012년 1월에 혈액암으로 입원해 투병생활을 하느라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대선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 지금도 사실이라고 주장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2년 1월 16일 날 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그 후로 그 해 연말까지 제 물결을 보면, 다 기록이나와 있고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의 말씀이 바뀐 것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질문에 답변하면서 '2012년 12월 세 번 정도 갔던 것이 기억나는데 두 번은 유세장에 갔었지만 선거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이 바뀌었고, '세종시 출정식과 12월 초순경 병천이란 곳에 갔던 기억이 난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7일 천안 유세 영상에 나오자 '중앙당 차원에서 활동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은 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종합해서 말씀……

○**정성호 의원** 아니, 총리가 답변한 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아니, 다시 제가 좀 더 물은 다음에 답변하세요.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답변에는 박근혜 후보가 충청지역을 방문했던 12월 7일 천안 아우내장터 지지유세, 12월 10일 충남 부여 지원유세, 12월 13일 대전시당 지지발언 세 번뿐이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

○**정성호 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정상적인……

말씀 들어 보십시오.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태에서 완전히 부인한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2012년 대선 법정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유세장에 서너 차례 갔었고 했던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정성호 의원** 아니, 말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바뀐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제가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지, 제가 제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중앙당에 이름이 들어갔어야지 충청남도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아니, 대통령후보가 지역에 와서 지지유세를 하는 데 그게 중앙당 차원 지구당 차원이 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 당시에 우리 당 선거 전략은 저런 정도의 정치적 비중이면 중앙당에 들어갔지 충청남도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대선 관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몸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다시 또 대선에 관여한 적 없었습니까, 선거운동한 적이?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없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총우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총우회?

○**국무총리 이완구** 총우회요?

○**정성호 의원**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두 달 전인 10월 11일 청양의 살레호텔에 총우회 초청으로 가신 적 있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총우회……

모르겠습니다. 총우회, 어떻게 됐는지.

○**정성호 의원** 기억 안 나십니까?

가서 가지고……

○**국무총리 이완구** 총우회는 도지사 시절에, 총우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전직·현직 관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 그런 조직이 총우회입니다.

○**정성호 의원** 아니, 그런데 이 총우회에서 2012년 대선 전에 10월 11일 청양 살레호텔에서 총리 모시고서 간담회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당시 몸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당시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쓰레기 치우는 일이라도 해야 된다. 후보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가 선거전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격적인 선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억이 나지……

○**국무총리 이완구** 10월은……

○**정성호 의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10월은요 의원님 어제 제가 보여 드렸지만 몸이, 머리가 다 빠져 가지고 물골이 돌아다닐 형편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 제가 잠깐 동영상에 띄웠습니다만 9월 20일자 TV조선에 나온 사진을 보면 머리가 다 반백이고 머리가 전부 다 스포츠 정도로 이렇게 짧습니다. 물골이 정상적인 물골이 아닙니다.

○**정성호 의원** 어쨌든 총리는 그 당시 혈액암 투병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하셨는데 대선이 본격화되던 당시 죽음을 앞두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다 이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는 병원 기록이 있으니까요.

○**정성호 의원** 2012년 9월 6일 자 대전·충청 지역 언론인 중도일보의 기자 최재현 정치사회부장과의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자들이랑 가끔 통화를 하지요.

○**정성호 의원**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지난 달, 2012년 8월입니다, 8월 29일. ‘골수 채취를 해 보니 암세포가 제로 상태로 나왔다. 결과가 좋게 나와 마음이 편하다. 말씨는 97~98%가량 건강했을 때로 돌아왔다’, 쾌활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전했다고 하고 덧붙여 ‘퇴원한 지는 40여 일 정도 됐고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과 지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화했다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언론인들이 제가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충청권 언론들이 저한테 많이 인터뷰 요청을 해 왔는데 당시에 암세포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현실 정치인이니까 아무리 제가 몸이 안 좋고 암세포가 많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차마 정치인으

로서 ‘제가 죽게 됐습니다’ 또는 ‘이제 나왔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 섞인 얘기로 언론인이 됐든 주변에 그 물골을 하고 했던 그 기억은 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처절한 자기 절규지요.

○**정성호 의원**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7월 말에 퇴원하고 9월경에는 상당히 건강을 회복했고 10월 11일에는 충우회 가서 발언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제 권은희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10월 23일에 만났느냐는 사실관계 요청에 대해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무엇을 만나겠느냐?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그 당시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전후로 하면……

○**국무총리 이완구** 그 당시에 충청권 언론에 저의 찍힌 모습이 인터뷰한 게 모습이 나올 겁니다, 한 7~9월 때. 그때는 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러면 당시 건강 상태 확인하기 위한 병원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럼요.

○**정성호 의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좋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부터는 본 의원실이 받은 제보 진술을 근거로 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궐선거에 당선 뒤인 2013년 5월 중순경 국회 앞 3층에, 의원들이 자주 가는 중식당 외백에서 총리가 초청해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총리가 초청했다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성완중 회장뿐만 아니고 충청권 의원들한테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올라 왔으니까 외백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거는……

○**정성호 의원** 단독으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단독으로 제가 어떻게…… 어떤 특정 의원을 만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든 뭐든 당선되었든 특별히 감사 표시할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때는 제가 평의원이지 원내대표가 아니지요.

○**정성호 의원** 그 당시 제보에 따르면 성 전 회

장이 특별하게 선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식사를 한 거라는데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 되어서 와서 충청권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성 전 회장과는 단독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자, 주목을 해야 될 사안이요,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 전에 제가 성완중 회장과 얼마나 많이 만났는가를 주목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 4월 24일 선거 전에는 제가 그 분을 만난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4월 24일 보궐선거 당선이 되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니까 성완중 회장과 같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이분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성호 의원 어제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완중, 이완구 독대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본 사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독대라는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상호…… 의미가 그런데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만나는 것을 독대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정성호 의원 그런데 이 내용이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던 날 성완중 전 회장이 참석했고 이완구 총리와 독대를 했다고 들었다’ 이런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바로 들어오기 전에 저도 보도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4월 4일에 보도에 나온 도의원이 자기는 본 바가 없다라고 또 기자회견했다고 하는 소식을 보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는 하여튼 분명한 것은 4월 4일에는 등록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도청 개청식 하고 나서, 제가 지역구로 가니까 있었던 그거 이외에는…… 수많은, 첫날 오시는데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누가 누구를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사무실 개소식은 3월 25일에 해 가지고 사람이 한 600명 이상 왔고……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후보 등록은 4월 4일에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러면 4월 4일에 후보 등록은

누가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 보좌관을 시켜서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 보좌관이 오후 2시 반에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리고 그 당시 총리는 대전에 있었던 충남도청…… 아니지요, 충남도청 준공식에 세종시의……

○국무총리 이완구 홍성에 있는……

○정성호 의원 예, 홍성에 있는 거기 갔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그날 대전시…… 아까 총리께서는 그날 기자들도 개소식 날 개소해 가지고…… 아니, 사무실…… 등록일에 기자들도 많이 왔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날은 대전·충남의 기자들이 다 도청 개소식에 가 있어 가지고 후보자 사무실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아, 개소식에 갔다가 그분들은 또 부여로 가셨지요.

○정성호 의원 개소식이 아니고, 개소식은 3월 25일에 있었고.

○국무총리 이완구 개소식은 3월 25일 맞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록은 4월 4일에 했는데 성완중 회장이 갔다가 총리와 독대한 것은 4월 4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목격자들은.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정성호 의원 4월 4일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기자들도 없었고.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도 선거를 해 보셨습니까마는 첫 등록날이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 그날 도청 개소식에 가 가지고 기자들은 다 거기에 있었고 그날 거기 가서 개소식을 마치고 후보자는, 총리는 사무실로 들어 왔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하여튼 제가……

○정성호 의원 그날 독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도청 준공식은 2시부터 3시 반까지였으니까요. 겹치지가 않지요.

○정성호 의원 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성완중 전 회장이 3000만 원을 줄 정도라면 후원금이라도 줘야 한다. 후원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긴밀

한 관계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다른 동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받았으며 제가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 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의원들의 공식 후원금 입금자를 전부 확인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 다마는……

○정성호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후원자가 '성완중'으로 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원이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희들 의원들끼리 서로, 의원들끼리 누가 얼마를 누구를 했는지 그거는 공개된 비밀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어제 제가 답변 말씀 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성호 의원 확인……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완중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는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정성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공개할 수 있다, 선관위 가면 알 수 있다, 선관위 가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어제 그 발언……

○정성호 의원 성완중 공식…… 본인 이름으로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 말씀은……

○정성호 의원 제3자 이름으로 만약 낸 거를 확인했다고 하면 어떤 정보를 근거해서 총리가 그거를 확인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그 말씀 직후에 어떤 의원께서 '아, 내가 그쪽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받았다고 했잖아요, 나뉘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정성호 의원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제 그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원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500만 원!」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런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우리 동료들 끼리는 다 압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 매우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정치인 누구도 성완중 의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치적 저의가 뭘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 비공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깐 어떤 의원님께서 '아, 그거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지요.

○정성호 의원 총리께서 어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돈 받은 증거는 누가 수집하느냐고요? 증거를 수집할 책임, 유죄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히 검찰 수사기관에 있지요.

○정성호 의원 검찰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법무부장관은 총리가 통할하는 내각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증거가 나오면 목숨 걸겠다 그러면 검사들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법무부장관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무총리가 일반 법무행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을 통할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정성호 의원 아니, 총리!

○국무총리 이완구 법무부장관을 총리가 어떻게…… 검찰 수사를……

○정성호 의원 지난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면서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을 입증하는 증거들 찾고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좌천됐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저는……

○정성호 의원 그런데 총리가 증거가 나오면 목숨 걸겠다고 하는데 어느 검사가, 어느 검찰이 증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의 그런 발언과 관계없이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는 대통령이 유고 시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총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국가와 민족이지 개인의 명예와 자리보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총리가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정말 위기에 처한 검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정말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하셔야 됩니다. 사퇴하는 게 그게 정도입니다. 그게 총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의원님이 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정성호 의원 이것은 연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지요. 우리는 선출직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선출직 정치인이 그러한 메모나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거취 문제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총리도 수사기관에 종사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신용성의 정황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제 국민에게 사과 못 한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정성호 의원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 언제,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언제, 어디서 한 말씀이시냐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야 누가 그 말씀 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있습

니다.

○정성호 의원 지난 2월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정성호 의원 “이번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총리가 하신 말씀이예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가 근거 없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정성호 의원 이게 왜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거 참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이완구 또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성호 의원 이게 왜 근거가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지금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의원님들 보십시오.

3월 12일 날 제가 담화를 발표하고 말씀드린 대로 3월 18일 날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3월 22일 고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한 통화의 전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저하고 친밀한 관계면, 같은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적어도 3월 22일 전화가 있는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7, 18일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전화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수사를 당하는……

(○은수미 의원 의석에서 — 총리님, 이 자리는 개인의…… 소명하는 데가 아닙니다)

은수미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압수수색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개인 소명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자, 의원님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우선 질문 답변을 좀 들어 주시기 바

합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쓴 유서라고 하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치나 증명력의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어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고 관련자들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갈 것이고요.

그동안 총리가 과연 내각을 장악해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국무총리 이완구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왜 여덟 사람이냐 하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요. 왜 도대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전화를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었다면 당연히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인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정성호 의원 그것은 총리의 주관적인 생각이요, 정말 답답합니다. 총리도 부정부패 척결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리고 대통령도 4대 개혁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것을 진행 못 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옵니다. 결국 총리가 사정의 당사자인데, 수사의 당사자인데 어떻게 국정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밝혀질 것이고요.

저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고 있는 자원개발이 문제가 덮여져서는 안 된다, 정말로 심각한 자원개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2일 저는 총리담화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3월 16일인거요, 그 며칠 후에 공기업 사장들을 불러서 해외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삼십몇 조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삼십몇 조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대단한 걱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의원 총리가 그 자리에 계시는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들어가기 바랍니다.

다음 기재부 1차관, 주형환 차관 나오시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차관, 서울시청에서 양주시청까지 혹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잘 모르시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어디……

○정성호 의원 양주시청.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28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면 1시간 반이 더 걸립니다.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기 북부의 도로 보급률이 채 1%가 안 됩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 규제, 그린벨트 규제, 온갖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안보로 인한 혜택은 국민 모두가 보고 그 희생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국가가 정의로운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래서 저희도 예타 할 때 지역 균형 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접경지역 같은 경우도……

○정성호 의원 지금 경기 북부,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포천 같은 데서는 도로 철도 하나 짓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주의 전철 7호선 문제도 이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는 LH가 6조 이상 투자해 가지고 신도시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정성호 의원 그런데 전혀 편익들이 안 나오니까.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로요, 수도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계속 경제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6조 원 내놓고서 다 허허벌판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영호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고 온갖 규제가 다 잡혀 갖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안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철도 같은 것은 시작해도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정성호 의원 대통령께서 계속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씀하시고 통일과 대륙을 위한 어떤 진출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에는 아무런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너무 기계적인 어떤 적용도 하지 마시고 정말 국가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군사도시, 접경지역들, 그다음에 수도권 내 상대적이고 또 절대적인 낙후지역 이런 것에 대한 지표들 좀 바꾸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 위주 분석의 한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200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타 할 때 지역 균형 발전 비중을 높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상반기 중에도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지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별도 지표 선정은, 또 다른 낙후된 지역들도 있거든요, 영호남 지역 같은 데……

○정성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성호 의원 국가 안보의 베니피트는 국민 전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코스트는 지역 주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다음 동두천,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정성호 의원 동두천이 주한미2사단 주력부대가 근무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동두천에 미2사단의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사단 떠나면 거기에다가 신도시를 유

치하든지 산업단지 유치하든지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동두천 지역에 미군기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역 시 전체 면적의 무려 42%입니다. 지역 경제 21% 정도가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땅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정성호 의원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주권이 미치지를 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여기는 지역에서 산업단지 유치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문제요, 지금 기재부에서 내부 기반시설 조성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두천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 기재부가 하는 절차 다 따르면 2018년도 이상에나 될까 말까 합니다. 2016년도 미군 떠나면 지역은 망합니다. 완전 붕괴됩니다. 민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관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답변 좀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아마 동두천 산단 조성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마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 정책적 사업의 예타 면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긴급한 위기 대응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타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예타가 신청이 되게 되면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이라든가 기존의 면제 사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타 신청 자체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새누리당 전 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분당을 출신 전하진입니다.

먼저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현 정국에서 진작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저의 고민을 지금 하자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든 언론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모여져 있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 제기하는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부디 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예견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없어지는 일자리는 3D 프린터나 또는 로봇 등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지난 수십 년간 발생시킨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지구 황폐화 문제가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구 운명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에 따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자연 감소가 경제성장을 낮출 것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기존의 산업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 몇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몇 년 후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돼야만 되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정부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20년 뒤에 지금 학교에서 받는 이 교육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최근 IMF는 올해부터 2020년 사이에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내수 부진은 또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왜 쌓아두고 있겠습니까? 사라지는 일자리, 사라지는 사업, 사라지는 소비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위기감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노키아나 소니에서 봤듯이 기업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책은 글로벌시대에 맞게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미국 갤럽에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118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24계단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론도 분배론도 이제 미래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나 정부는 과거의 틀로 미래를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닥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대로 안내를 국회가 또는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화의 끝물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더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마치 아무런 합의나 계획 없이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부수고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개발구역에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분들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미래의 조감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하며 재개발에 동의하거나 반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정부가 큰 틀에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감도가 있어야 국민이 이해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

까?

새로운 일자리는 창업만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망라해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내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창조경제의 실현과 국민행복 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을지 큰 틀의 전략조차 아직 없는 정부에 오늘 이 시간이 구시대적 사고를 넘어 미래를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미래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창조경제특위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 R&D 투자규모가 18.9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규모나 R&D 역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기준해서 국내 R&D 사업화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R&D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구도 있고 응용·개발연구도 있습니다마는 종료와 동시에 사업화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화가 여러 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화 성공률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업화 건수를 지금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전하진 의원 예,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의 R&D 사업화는 영국이 70% 정도, 미국이 69%, 일본이 5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아마 장관님 보고내용에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률을 따지지 않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18.9조라는 돈은 엄청난 국가예산인데요. 이 국가예산이 지금 투자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R&D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화가 됐는지,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20%라는 이 데이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공식으로 인용한 자료인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그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우리나라 국가의 사업화가 지금 말씀대로 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연구의 성격상 사업화랑 관련 없는 연구에 국가에서 많이 비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이 일단 빠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응용·개발을 겨냥하고 있는 연구들도 평가시스템이 과거에는 사업화랑 연계가 되지 않아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업화를 좀 겨냥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하진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인충전 버스가 있었습니다, 과학원에서 개발한. 이 개발은 아마 해외 언론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인충전 버스가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하진 의원 인프라가 안 돼 있지요, 형식승인도 안 돼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9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인증이라든지 법과 제도를 바꾼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개발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선택은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건 첨단이다. 이걸 좋은 거다’ 뭐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제품 개발, R&D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R&D 투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감도가, 다시 말해서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틀의 전략도 상당한 인적자원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틀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창조특위에서 급하게라도 올해 이런 조감도를 만들 수 있는, 큰 틀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라도 만들었으

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의 시스템적 혁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송곳으로 찌르듯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저희도 R&D 계획을 지금 새로 보고 있고 혁신 과제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하진 의원** 예를 들어서 원격의료사업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의료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로봇들한테 그 시장을 뺏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5년, 10년 뒤를 조망하고 이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지금 현재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한의사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로봇들은 어떻게 또 참여시킬 건지 이런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개발해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어떤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형식승인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계획을 해야만 적어도 몇 년 뒤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는 것을, 그런 청사진을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청사진이 나왔을 때 ‘아, 이것이 새로운 창조경제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단 몇 건의 조감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예, 의원님 말씀에 따라 이미 ICT의 여러 분야 또는 기초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구체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계획을 시작을 했고, 몇 가지는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기재부차관 나와 주세요.

올해 115조 원의 복지예산을 통해서 17개 중앙부처가 지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정책이 약 3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수혜자 1000명

가운데 OECD 국가 평균의 60분의 1 수준인 0.22명의 공무원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상담 건수가 약 300건입니다. 이런 복지시스템이,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한 오버 워크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든 부처가 각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부처마다 지금 다 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지속적으로 그 바우처 카드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요, 작년 2014년에는 육아 관련 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을 시켰고요. 올해에는 그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분야 카드들을 7월까지 통합할 예정이고, 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하는 그 카드들도 많습니다, 전자바우처도. 이것도 통합할 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의원** 사실 일반적인 카드회사의 입장에서 한 사람한테 하나의 카드를 주면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 한 사람한테 하나의 복지카드를 주면 모든 부처가 주는 그 복지예산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는 또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가 또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 하면서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큰 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를 주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복지예산을 그 카드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는 상당한 경비 절감이,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각 국민당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외에 타 부처의 카드도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이렇게 하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보면 2020년까지 8% 성장, 생산 240조, 수출 2100억 불,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전하진 의원** 자, 이런 목표가 과연 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2, 3년 뒤에 은퇴하고 나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돈 몇 푼 더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청년 일자리는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자리가 도대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기술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첨단기술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전하진 의원** 이렇게 첨단기술을 나열해 가지고는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국민의 서비스, 편익, 이것이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는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하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조감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술개발은 그 시초에 불과하고, 그 기술개발을 토대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제도라든가 인프라를 같이 지원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산업화가 되도록, 그래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진 의원** 올해 안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현실에 발목이 붙잡혀서 우리가 제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간의 우리 사회 변화가 그 이전의 1만 년의 변화와 맞먹는 규모다라

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비쳐질 20년의 변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대변혁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이기주의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돼서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큰 틀의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서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만 멀리 봐 주십시오. 이제 사람과 사물이 하나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가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요 방관자로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애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창조경제 실현은 정권 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부디 시대적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범부처 차원의 큰 틀 전략을 세워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상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전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운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국회의원 박광운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마는 위중한 상황이라서 최근의 현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과 그 가족분들께는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야 할지 모를 만큼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면서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다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염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무참하게 조롱받고 모독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세월호 참사 1년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권력형 친박 비리게이트라는 대형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고 성완중 회장이 목숨을 던져서 고발한 내용입니다. 권력이 휘청거리고 나라가 흔들거릴 지경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로 양심에 근거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는 고 성완중 회장이 목숨을 바치면서 고발한 증언 가운데 총리에게 2013년 재·보궐선거 때 3000만 원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단 한 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속의 저 건물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충남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총리의 아마 재·보궐선거 사무소로 쓰였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부여 천막사 2층……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다른 건물입니다.

○박광온 의원 다른 건물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일부 보도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

○국무총리 이완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고 성완중 회장이 찾아갔다는 보도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봤습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사실이 아니, 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사실이 아닌지……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막 채널A에서 입수한 것에 그 당시에 고인께서는 갔더니, 흥 모 무슨 의원 이렇게 나오니까, ‘흥○○ 의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충청남도 도의원에 흥 씨를 가진 분이 두 분이고 부여군에 흥 씨 가진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충청남도의 당시 도의원으로 계시던 흥 두 분 다 ‘성 회장을 못 봤다, 성 회장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뜬 기사입니다.

성 회장님, 고인의 장례위원장께 인터뷰를 했는데 ‘4월 4일 4시경 부여에 성 회장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막 뜬 것을 지금 갖고 왔습니다마는 저 역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워낙 그날 많이 왔기 때문에.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성 회장이 오신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워낙 많이……

○박광온 의원 오신다가 아니고 기억이 없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성완중 회장은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3000만 원을 줬다고 증

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 회장 측 관계자는 사무소 한쪽 칸막이 안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데도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지금 그 말씀 속에, ‘거기에는 도의원 홍 모 의원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 내용이 보도가 돼 있는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찾아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지금 모 언론에서 홍 모 의원들을 아마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박광은 의원 홍 모 도의원?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은 의원 홍 모 도의원의 말씀이 본인도 기억이 없다 그런 말씀……

○국무총리 이완구 ‘못 봤다, 기억이 없다’인데 그분 중에 가장 저기한 게……

‘성 회장을 본 적이 없다’ 홍표근 전 도의원, 홍성현 전 도의원, ‘성 회장을 못 봤다’, 그리고 바로 성 회장님, 고인의 장례위원장한테 또 인터뷰를 땀습니다. ‘4월 4일 4시경 부여에 성 회장이 있었나?’ ‘기억이 없다’ 이렇게 땀습니다.

○박광은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이분들 인터뷰 내용 이니까요.

○박광은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은 의원 조금 더 보도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은 의원 특정 제품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비타500의 박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 기억이 없습니다.

○박광은 의원 그러면 성 회장과 그 관계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소설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참 정말로 답답한 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지요, 왜 그랬을까, 이게 어디서 착오가 생겼을까.

첫째는 충청포럼이나 본인의 말씀으로는 제가 인사청문회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때 충청포럼이라는 성 회장님이 주관했던 거기서 충청도에 많은 플래카드를 붙이고 제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때까지

만 해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2월 달 아니겠습니까? 2월 17일 날 어간 이니까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성 회장님이 급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 말씀 올린대로 3월 12일 날 대 국민담화에 자원개발 문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섭섭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은 의원 그 부분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소 안에 칸막이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칸막이는 없고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박광은 의원 방이?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위원장 방이 있습니다.

○박광은 의원 별도로 설치된 방이 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방이 폐쇄된 방은 있습니다, 칸막이가 아니지요.

○박광은 의원 총리께서는 그때가 후보 등록 첫 날이라 언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누가 왔는지 잘 모른다, 기억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오전에.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은 의원 그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무소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2 시에서부터 3시 반에 끝난 그 도청 행사, 도청 준공식…… 그게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홍성. 또 제 지역구였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홍성에서 만났지요. 또 제가 도지사 사퇴 이후에 4년 만에 찾은 도청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를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고 부여에 늦게 갔는데 가 봤더니 그날이 등록 첫날이니까 여러 분의 기자분과 여러 분의 지지자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누가 누군지—의원님도 선거를 치르셨습니다만—기억을 못 합니다.

○박광은 의원 그날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선거 때 솔직히 수시로 만나고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광은 의원 총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녀갔을 수는 없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다녀간 사

람들도 꽤 많았겠지요, 이분뿐만이 아니고. 선거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료 의원들 선거전에 가서 보면 안 계시면 가서 ‘다녀갔다고 인사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온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선거 때 후보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그 건물이 플래카드가 없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사무소도 착각을 했는데 자료화면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박광온 의원 예,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국무총리 이완구 예, 보여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여 천막사, 저 2층에 사무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런데 제 사무실 밑에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왜 천막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광온 의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제 사무실 밑에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 보좌팀들이 그 선거사무소 건물이……

아! 이것은 저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현재 사무실은 새마을금고가 있고 과거의 선거사무실……

○박광온 의원 예, 선거사무소를 말씀……

○국무총리 이완구 예, 선거사무실을 의미하는 거네요.

○박광온 의원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제 사무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실 이렇게 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제 선거사무실은 새마을금고가 밑에 있고요.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거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거 치를 때 사무실?

○박광온 의원 맞습니다, 2013년 4월 4일 선거

사무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거는……

○박광온 의원 그 건물이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건물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건물과 착각을 했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총리께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완중 회장이 그날 왔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하도 총리가 말을 바꾼다고 이렇게 하니 참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당락이 있는 선거전에서 누가 누가……

○박광온 의원 그러면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불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돈 받은 것은 명확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칙상? 그거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박광온 의원 제가 국민들이 혹시 선택적 기억증 혹은 선택적 망각증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온 의원 자,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총리께 성심성의껏 했다, 주요 당직자에게 이분은 큰일을 해야 하실 분이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들은 신뢰를 중요시한다면서 자신이 희생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무엇이 억울했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 말씀에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고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를 야를 막론하고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압니다. 이분의 성장 과정과 함께 이분의 부의 축적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증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반드시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때문에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를 다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같은 동향에서 커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관계없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도 고향이 대전이시니까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박광온 의원 자, 총리께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거나 혹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는데, 제가 지난 13일 오전 대정부질문부터 어제까지 총리의 발언을 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3일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선에 관여하지 못했다, 2012년 1월 초 혈액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해 말까지 투병생활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답변 이후 대선 때 유세장에 계시는 모습이, 사진이 보도되자 그날 오후에 민병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세장에 한두 번 간적은 있지만 역시 투병 중이라 실제 선거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미묘하게 표현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다음날인 어제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백균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2년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과 12월 초순쯤 유세장에 두 번 정도 갔던 것 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데 유세 사진에 이어서 유세하는 7분짜리 동영상도 어느 매체에 공개된 뒤인 어제 오후에는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단 말은 중앙당에 관련이 안 됐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지요?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이 발언들이 미묘하지만 즉 변해 오는 겁니다, 즉,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에서 ‘중앙당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이렇게 변해 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그 표현의 미묘한 차이에서 총리가 말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군인만 국방에 관여합니까? 지방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은 국방에 관여하지 않은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포괄적……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박광온 의원 맞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박광온 의원 충남 명예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유세장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유세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여한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의원님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유세장에 가서 서 있거나 또는 일부 유세했던 것보다는 이 대선자금과 총리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를 깔고 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2012년 당시에 저는 중앙당에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몸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저 정도의 충청권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중앙당의 선대위원, 어떤 직책이든지 맡고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것은 가지를 못했으니까요.

○박광온 의원 그 부분은 제가……

○국무총리 이완구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박광온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어제 한기호 의원님 말씀에 중앙당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박수현 의원님 말씀에 ‘12월 달에 범정 선거운동이 시작돼 병천에 가서 유세 몇 번 하고 나머지는 유세장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권은희 의원님 말씀에 “충청권의 ‘명예’ 자를 붙여 가지고 당직을 발표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는 대선과 관련

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 그런 면에 중앙당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고,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월에 유세장에 몇 번과 병천에서 유세했다는 것은 나중에 기억을 되찾아서, 그 말씀입니다.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선에 관여하지 못한 이유로, 그러니까 못 했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때 투병 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10월 23일 시내 한 호텔에서 성완중 회장과 만나지 않았느냐는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때 투병시절의 사진을 제시하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런데 그 사진이 투병시절에 찍은 사진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경에 머리가 자라지 않은 반백이 된, 아주 몰골이……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입니다. 저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20일 자입니다.

○박광온 의원 9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저 사진은 9월 24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다음 화면……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머리가 없고 약간 붓고 몰골이 이상하나요? 저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직원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저게 TV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홍성신문에 난 지방지, 군 단위 신문에서 난 거라고 그래요.

○박광온 의원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9월 20일 자입니다.

○박광온 의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총리께서는 이미 9월 20일에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 몰골이 건강 회복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광온 의원 홍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박광온 의원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첫 번째 사진은 총리가 2012년 9월 24일 홍성신문, 지금 말씀하신 홍성신문과 인터뷰 사진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몸이 완쾌돼서 한두 달 후에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다음,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11일에는 전·현직 충남 도의원 40여 명이 모여서 이완구 전도지사 채유 환영회를 엽니다. 플래카드 보이시지요? 저것이 10월 11일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그러면 만일에 그때 총리께서 투병 중이었다면 투병 중인 분을 모셔다가 채유 환영회를 여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한 사람의 정치인입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암 투병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어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보신 대로 저 몰골이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은 아니지요? 머리는 짧고 얼굴은 붓고, 저 몰골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의원님, 호소합니다.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박광온 의원 예, 한번 보여 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저도 정치인이기에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박광온 의원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남들 앞에 나 죽지 않았 다……

○박광온 의원 거짓말로 건강해졌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많이 나아졌다라는……

○박광온 의원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확신이 없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건강해졌다는 확신이 없는데, 도의원 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정치인의 기본 속성 아니겠습니까?

(「아, 참 구질구질하시네!」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박광온 의원 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남 얘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떤 지경에……

(「본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언제 어떤 입장에 처할지 모릅니다. 남의 병문제를 놓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충청도는 휴업하시고……」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박광온 의원**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자리 때문에 연일 싸우고 있는데—아마 중앙선대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새가슴들이다. 자리가 무슨 소용이나? 후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리는 따지지 않겠다.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그런 심정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총리는 앉지 않고 서서 40여 분 동안 시종일관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건강해야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됐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저 머리 길이와 물결을 보면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걸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로 못 볼 겁니다, 누구라도.

○**박광온 의원** 2012년 10월 23일 성완중 회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투병 중이기 때문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말하자면 저때의 활동상을 본 국민들은 활동 중이었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무엇이 답답해서 저 물결을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만나러 돌아다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답답한 면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이해관계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지, 저 물결 가지고 무슨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총리께서는 성완중 회장을 스물세 차례 만난 것으로 보도되자 원내대표로서 만난 것이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동료 의원 및 원내대

표.

○**박광온 의원** 동료 의원 및 원내대표로 만난 것이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원내대표가 되신 것은 언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2014년 5월 달입니다.

○**박광온 의원** 5월 8일.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광온 의원** 성완중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마 5, 6월 달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광온 의원** 예, 6월 26일인데요. 그 50일 사이에 다섯 차례를 만나신 것 외에 열세 차례는 의원 신분으로 만난 것이다, 원내대표가 아니고?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성완중 의원님께서서는 우리 당 충청남도 도당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당 위원장 대의원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의원이었으니까요,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만나 뵈기도 했고 또 제가 원내대표 된 후로는 원내대표 이완구 대 국회의원 성완중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의원과 의원 간의 만남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 잦은 만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친하지 않다고 굳이 강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굳이 제가 생각을 해 보면 2006년, 2007년도에 도청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아주 격한 싸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계좌 추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07년 1월에 송사가 시작이 되어서 2008년 11월에 끝났습니다. 2심에서 성완중 회장이, 회사가 패소를 했지요. 그 과정에 검찰의 수사가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되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계좌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극렬하게 나뉘었습니다.

그 후로 2009년 12월 저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나서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얘기거든요. 2012년, 2013년 얘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제가 성완중 회장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2007년, 2008년의 감정이 그냥 이어진 거니까 굳이 성완중 회장과 저와의 관계는 좋아질 이유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고 이런 상태

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광온 의원 오히려 불편한 사이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크게 개인적 싸움은 아니었지만 제가 있는 도청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극렬하게 싸웠으니까 별로 유쾌한 관계는 아니지요.

○박광온 의원 유쾌한 관계는 아닌데 이렇게 자주 만난 것을 놓고……

○국무총리 이완구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의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박광온 의원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실 텐데……

○국무총리 이완구 원내대표는 150명의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는데요, 우윤근 대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소속 의원님들을 수시로 만나지요.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게 1년이면 수십 번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의 자리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의원님들께서.

○박광온 의원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원내대표 집무실에 들러서 잠깐 만나는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에.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성완중 의원께서 같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그분은 국회의원이었지요. 그 후에 도당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성완중 의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의원이었지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문제로 공식적인 만남이었지 개인적인 속내를 주고받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연장선상에서 썩 그렇게 속내를 드러낼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박광온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언제요?

○박광온 의원 이 일 이후로.

○국무총리 이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대통령과의 통화내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의원 거취와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나누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에 답변을 앓는 게 도리 같습니다.

○박광온 의원 여전히 총리직은 자진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남겨 놓고 싶습니다, 저도.

첫째는 이 경우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대단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정반대의 경우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면 ‘아하, 그랬구나’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총리라는 자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이러한 결로 인해서, 이 자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국무총리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에 맨 먼저 자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총리는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광온 의원 맨 먼저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일종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박광온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총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또 최근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총리가 자리를 비켜나는 게 좋다 하는……

○국무총리 이완구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광온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국무총리실이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추경호 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관세청 금감원,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이 자리에서 검찰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박광온 의원 모두 경남기업과 관련된 사안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공기업 사장한테 보고는 받았습시다마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습시다.

저는 총리직에 있지만 법적으로나 사실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광온 의원 알겠습시다.

그러면 이 부분, 3월 12일 부패척결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시다.

○박광온 의원 그날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총리에 취임을 해 보니, 우리가 경제살리기가 가장 막중한 당면 과제인데 사회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고 판단했습시다. 공기업의 부채가 500조, 600조, 엄청난 부채가 있고요. 특히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습시다마는 삼십몇 조가 투입이 됐고, 향후 또 삼십몇 조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향후 수십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총리로서 한 번 끊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했습시다.

○박광온 의원 자원개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바람이었습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다음 날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이 포스코 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시다, 총리의 말씀이 있고 나서.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을, 회사를 갈 때는 상당한 수개월의 준비 작업과 함께 증거 축적이 필요하습시다.

○박광온 의원 맞습시다.

○국무총리 이완구 따라서 제가 담화를 발표했다 해 가지고 며칠 후에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지

요.

○박광온 의원 예, 맞습시다. 바로 그 점인데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관련하여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 오비이락 격으로 검찰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메커니즘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총리 담화와 검찰 수사는 전혀 별개의 것입시다.

○박광온 의원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포스코와 경남기업에 먼저 손을 댄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모릅시다.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연 모르고요. 큰 틀 속에서 자원개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학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드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총리는 했습시다.

○박광온 의원 총리가 지금 자리에 계속 있기 어려운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그 안에 들어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시다.

○박광온 의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합시다마는 적어도 검찰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나라는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권 행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확실하게 행사된다고 저는 확신하습시다.

○박광온 의원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적어도 총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시다마는 총리 말 한마디, 총리의 전화 한 통화, 어디 숨겨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느 특정인, 특정 집단에 대해서 감싼다든가 또는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권 행사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제가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시다.

○**박광온 의원**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무총리 이완구** 아닙니다. 저는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제가 총리를 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국가와 국민 그리고 철저한 총리 직책에 충실할 것입니다.

○**박광온 의원** 그때 당시 자리에 연연하는 새누리당 간부들을 비난했던 그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자리, 저는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충청남도 도지사 자리도 사실 제 책임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신뢰,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분으로, 누가 저한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2009년 12월에 도지사 자리를 내놨습니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말씀은 공직자가 어떤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총정의 말씀이지요.

○**박광온 의원** 지금 결단하는 것이 본인과 새누리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 경우라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번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박광온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박광온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봉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심학봉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협상 등 국가 대개조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동시에 부진해지는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수도권과 비수도

권의 상생발전 모델을 찾아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꼭 해결해야 할 우리 국가적 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분열적 사고, 흑백논리 극복을 통한 국민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남으로 계층별로 세대적으로 이념적으로 구분 짓는 대립적 사고의 틀 속에서는 선진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도 대립적 사고가 아니라 통합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를 대한민국의 한 덩어리로 보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시너지가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학봉 의원** 그런데 올해 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래서 저도 그 보도를 좀 봤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경제가 하도 어렵다 보니까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규제에 묶여 있는 조치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학봉 의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학봉 의원**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영호남 대립 즉 동서대립으로 지역주의를 만들어 왔고 현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서대립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경제력 격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60년대 이후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의 기반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돼 왔고요. 이제는 세대 간·이념 간·계층 간 갈등까지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

난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심학봉 의원 따라서 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경제, 교육, 문화,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이제는 새로운 신지역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지역주의 원조인 동서대립을 넘어서 이제 남북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심학봉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호남의 동서대립, 앞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남북대립이 우리 국가에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활동인구나 예금,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등 사회·경제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낙후도 지수 또한 수도권은 1.717인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고요. 그런데 1인당 조세부담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1인당 재산소득은 수도권은 141만 원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와 이 비수도권의 세트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정책으로는 경제적 격차에 의한 남북대립, 신지역주의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저 본인의 생각인데요.

총리님,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심학봉 의원 참여정부는 강력한 지역분산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경제적·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TX역과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혁신·기업도시인 경우에 과급효과와 그 성공 가능성

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참여정부의 혁신과 기업도시 또 행정도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추진이 다소 미진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지방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철학이었던 혁신과 기업도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지부진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학봉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전략산업의 성과를 보면 총리님 생각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경북의 신소재부품산업, 광주의 광산업 등 각 지역별로 산업적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선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성장률과 특화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존의 지역산업과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전략산업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화된 지역산업과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총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혁신이나 기업도시의 발상 자체는 제가 찬동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특화된 것은 그 토대하에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5년 만에 한 정권이 설정한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산업의 연계성 같은 문제와 함께 앞으로 이 연결이 더 견고하게 된다면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학봉 의원 그러니까 공간 재배치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산업의 집적도나

산업의 성과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심학봉 의원 따라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성장 해법인 산업특성화도시를 본 의원이 새롭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란 특정 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산업 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 산업도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구미 하면 전자산업이 떠오르고 포항 하면 철강, 울산 하면 자동차, 광주 하면 광산업이 떠오르듯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 업종 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총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구도가 잘된 것 같습니다.

○심학봉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의 주력 업종과 관련된 수도권의 협회와 조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지대의 지원기관들을 산업특성화도시에 집적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 부처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이들 지원기관에 위임되고 있고 많은 기업 활동이 이들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원기관들과 지역의 기업들이 한곳에 집적화된다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유동인구가 확대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주력 사업, 주력 업종들과 지원기관들이 함께 집적하고 집적화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학봉 의원 지금 현재 세종도시로 이전, 혁신도시로 이전 등 많은 수도권의 지원기관들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된 지원기관이 한곳에 집적이 돼야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자산업과 관련된 구미공단의 기업 수는 700여 개에 달하고요, 고용인원도 6만 명, 생산액도 2조 3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이와 관련된 협회나 조합 등 지원기관 그리고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받는 IT·전자산업 분야 지원기관이 총 34개, 1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지원기관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IT·전자산업 관련 기업과 공장들은 공단에 있는데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R&D 사업, 인력 양성, 기업 컨설팅, 전시회, 이런 지원기관들은 전부 다 수도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비대칭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의 복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관련성이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이와 같은 산업특성화도시 모델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심학봉 의원 두 번째, KTX 등 SOC망과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보면 김천과 서귀포를 제외하면, 12개 거점도시가 있는데요, 인접 KTX까지 거리가 평균 45km입니다. 그리고 구미만 해도 인접한 KTX 김천구미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공단에서 40분에서 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구미공단에는 KTX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물류이동과 정주여건이 핵심인데 이러한 인프라하에서는 기업 투자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맞습니다.

○심학봉 의원 이제는 KTX를 운송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익성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라 산업동맥, KTX를 산업동맥의 하나의 역할로 놓고 산업특성화도시 조성과 함께 KTX 등 SOC 망을 함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아울러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7일 날 대통령께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창조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산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KTX 등 교통망 인프라가 안 되고는 이러한 약속들이나 선언이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특성화도시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향후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가칭 신구미역 신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단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거점의 핵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가 지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1년 2조 3000억에서 2013년 1조 4000억으로 4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총리님께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투자촉진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완전히 배치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보고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정부질문 끝나면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방투자보조금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감소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금액적으로 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에 투자할 기업이 없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심학봉 의원** 상반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일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는 지금 우리와 같이 저성장시대를 돌파하고 지금 혁신도시, 그다음에 기업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정책대안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심학봉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정부의 지역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나눠주기식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을 모색하는 네거티브식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간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고 산업이라는 성장엔진과 도시라는 공간구조의 융합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산업특성화도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부의 심층적 검토와 정책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심학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대전 서구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범

계 의원입니다.

먼저 주형환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차관님, 제가 이번에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제 질문의 요지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박범계 의원 2013년 5월 달에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신뢰받는 정부,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천명했습니다.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국세 확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절감을 무려 84조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더 이상 공약가계부는 지킬 수 없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고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비과세·감면의 혜택은 대재벌 기업, 재벌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약속했던 비과세·감면 축소 조정은 실제로 찢끔찢끔의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작년 불과 85%만 달성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무려 27조 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세원을 쥐어짜서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겨진 세원에 대해 제대로 발굴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세출을 절감하겠다, SOC 항목이 있습니다. 무려 11조 6000억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은 절감은커녕 1조 1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고백은 다름 아니라 근거가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과연 박근혜정부에서 공약가계부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에 있어서 차별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인 공약을 박근혜 후보가 선점했습니다. 누가 공약했는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그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2422억 전액을 기재부가 삭감했습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반의 반값 등록금이 돼 버렸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변질되었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재정 수준에서 꿈수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은 국가 완전책임을 공언해 놓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시·도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위기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고 대한민국의 위기고 국민의 위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차관께서는 헌법에 책임행정의 원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과 중산층만이 고통분담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 대기업과 슈퍼 고소득자들은 고통분담에서 열외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철학에 의해서 열외돼 있다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총 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5000억 이상의 재벌 대기업들은 그 실효세율에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부담을 해 왔습니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과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실마리를 푸는 첫 단계가 법인세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와 감세는 각각의 찬성론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경제학적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모든 계층이, 대한민국호의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재벌 대기업과 슈퍼 고소득자들은 열외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위기 두 번째, 매해 재벌 대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의결합니다.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눈속임하면서 통과시킵니다. 무슨 명목으로 하느냐고요?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고용을 증대시키겠다, 장래의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비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에 무려 500조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정부를 기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주주들을 속인 재벌 대기업의 지배주주들, 신뢰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관점에서는 법인세는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먼저 법인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해 가지고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심한 세제입니다.

○박범계 의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법인세 감세해 줬는데 경기가 정상화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데 투자가 이제……

○박범계 의원 투자가 활성화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의원님, 그 당시에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제반 여건 같은 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다소 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법인세를 낮췄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최저한세율을 높인다든가 고용투자창출세제 같은 것에 기본공제 같은 걸 낮추고……

○박범계 의원 짙끔짙끔의 미세조정이지요. 화끈하게 고통분담의 전선에 동참하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데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년 귀속소득부터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효세율 같은 부분들이 올해부터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지배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사내유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당기순이익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러든가 투자라든가 배당 증가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효과들 감안하면 차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그 실효세율 저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쇄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법인세 정상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얘기네요.

공약가계부 지킬 의지와 능력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공약가계부의 큰 틀 속에서 이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과세·감면 등 세입기반 확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8조 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14조 5000억 됐고요.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고소득층 위주로 저희가 비과세·감면들을 줄여 왔었고요.

세출 구조조정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 기초연금이라든가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 같은 핵심공약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쌀값 고정직불금 같은 경우는 원래 17년에 하도록 돼 있던 걸 저희가 작년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같은 부분도 올해 저희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박범계 의원 차관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닌, 사실 무근의, 공약가계부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대국민 사기를 한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 뜻은 아닐 거고요. 공약가계부의 큰 틀 속에서 정부도 그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제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경상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세입기반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세출 구조조정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완구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뭐 버틸 만합니다.

○**박범계 의원**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유를 좀 찾으신 느낌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보입니까?

○**박범계 의원** 예, 그렇게 보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검찰에 가서 가지고, 하도 의원들이 지금 의혹에 대해서 질문들을 사흘째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잘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의원님들께서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대충, 저도 오래된 기억이라 사실 좀 오락가락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하도 말씀을, 이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대충 정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신 건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뭐 오락가락보다는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이 답변시간에 표현이, 이 표현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잊어버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게 아니고……

○**박범계 의원** 제가 사흘 동안 죽 지켜봤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물론 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은 어느 누구도 현재는 모릅니다. 다만 이 의정 단상에서 적어도 한 나라의 총리가 의원

님들께서 질타하신, 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한 나라의 총리가 발언했을 때는 저 나름대로 비장한, 비상한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망인께서, 망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감히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개연성을 놓고 의원님들께서 균형 있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박범계 의원** 반대의 경우가 나온 답변의 질문의 요지는 일국의 총리로서 현재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정정당당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답변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반대의 경우도 중요하다, 제가 듣기로는 총리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이, 지금 의원님들 질의를 받다 보니까 망자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 말씀은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균형 있게 좀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박범계 의원** 총리께서는 경찰에 많이 재직을 하셨어요. 수사 업무에는 얼마나 재직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경찰을 12~13년 했습니다만 한 7~8년을 외국에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충남북청장과 홍성경찰서장 한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수사 같은 것 한 적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러면 수사를 거의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 1년 정도 한 것 외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래서 증거에 관한 증거법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고 성완중 회장의 유서와 다름없는 메모,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육성 녹음, 거기에 고 성완중 회장 지인들의 언론에서의 진술, 이것은 증거가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법률지식이 약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박범계 의원** 결국 이 수사가 총리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반대의 경우가, ‘나는 무고하다. 결백하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민들이, 심지어 총리께서 몸 담았던 집권 새누리당이 총리직을 사퇴하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 오늘 정성호 의원님과 박광온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총리 개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질문을 하고요, 제가 다른 쪽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꼭 소신껏 사실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박범계 의원 지난 3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자에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 대국민 담화 다음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차단에 대한 모든 역량 집중이라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화답을 했지요.

그리고 3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다음날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로 봤을 때 그 대국민 담화는 총리 개인의 즉흥적인 생각이나 총리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적어도 청와대와 총리실과 법무부, 대검 간의 모종의 전략회의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총리실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각 부처가 됐든 같이 서로 조율해 가면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 조율과, 정책적 방향에 대한 조율은 있었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따라서 사회기강 확립은 이 시대 또 이 시점에서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회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의원 그 조율은 언제, 어떤 단위로 하

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차원에서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박범계 의원 그 조율은 언제, 어떤 단위로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것은 총리와 함께 또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사회기강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조율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것이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 저도 청와대 있을 때 반부패 회의를 해 봤습니다. 검찰도 오고, 아까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던 반부패 회의 했습니다. 기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검찰, 경찰, 국세청 다 옵니다. 직접적인 수사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의미의 수사기준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이룹니다. 조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검찰에서 진행되던 자원외교 수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어느 정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검찰에 대해서…… 그 날 검찰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리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율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 봤던 것은 총리님의 담화는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나온 것이냐라는 취지로 여쭙 봤고 거기에 대해 그런 취지의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총리께서는 검찰에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자원외교 수사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고 거기에 일종의 편승하신 겁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총리님께서 적어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아니면 대통령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조율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담화의 성격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검찰에서 보고받은 바도 없고 보고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총리하

고는 상관없습니다.

○**박범계 의원** 제가 아까 일정을 말씀드렸지요. 총리님께서 담화를 발표한 그다음 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같은 취지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검 검찰총장이 마치 청와대와 총리실이 주도하는 이 기획 사정에 떠밀려서 하는 수사인 것처럼 보여질까 봐 마지못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듯이 ‘불쾌하다’ 하는 그런 일부의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뜻과 총리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7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검찰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총리께서는 자원의외고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조로 상당하게 관여돼 있고 적어도 대통령과 상당한 부분 인식을 공유했다라는 그러한 의문을 피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너무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 기강 차원의 분야는 민생이라든가 또는 건축이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또는 불량식품이라든가……

○**박범계 의원** 아니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사회 기강이 무너져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수사를 하라’ 또는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리께서 담화한 그다음 날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총리께서 담화한 불과 6일 뒤에 고인이 되신 고 성완중 회장이 오너인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의원님도 법조인 아니십니까?

○**박범계 의원** 제 질문에 답을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법조……

○**박범계 의원**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법조인이자 국회의원이시지요.

○**박범계 의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국회 의원이십니다.

○**박범계 의원**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한 기업에 압수수색이 들어 가려면……

○**박범계 의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입니까? 아니면 총리께서 적어도 검찰과 정보의 공유가 있었고 최소한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담화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압수수색을 들어갈 정도가 되면 상당한 자료가 축적이 돼야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박범계 의원** 물론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적어도 수개월이 일반적으로 걸립니다.

따라서 총리 담화 발표한 며칠 후에, 그다음 날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총리의 담화에 영향을 받아서 검찰이 수사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지요.

○**박범계 의원** 그러면 검찰은, 진행 중인 자원의외고 수사에 대해서, 비밀리에 진행 중인 그 수사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박범계 의원**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개별 사건에 대해서 총리가 보고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 제 취지는 일국의 총리는 의지만 있으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걸겠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적어도 검찰의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간섭으로 느끼기에 충분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번에 고인께서 남겨 놓은 이러한 것들의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어차피 이 문제가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대단히 제 경험직상—조그만 경험입니다마는—상당한 넓이의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현장에서 듣는 총리님의 태도와 말씀은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조금 전에 자원개발 수사에 대한 수사가 덮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 성완중 회장으로 불거진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8명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된 수사가 자칫 자원개발 수사, 이명박 정권을 향해 있던 그 수사에 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박범계 의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 건과 다른 것과 연결 짓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발상입니다.

○박범계 의원 어쨌든 성완중 고인의 유언과 관련되어서, 이 수사 국면과 관련되어서 정말 대단하게 진행되는 자원개발외교 수사에 대한 그것이 적어도 장애에 부닥쳤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던 자원개발과 관련된 5인방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라는 그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는 수사이고 또 자원개발 문제는 자원개발 문제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세심한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박범계 의원 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안 하시고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 사건……

○박범계 의원 자원개발외교, 그 수사 잘해야 됩니까, 대응해서 그만뒀도 괜찮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이번 이 사건과 자원개발이라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대정부질문 첫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성완중 회장의 메모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

귀에는 '총리님과 법무부장관이 적어도 한편이구나, 법무부장관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다음 날 경향신문이 어떠한 보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속단을 하시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가, 총리님께서 지금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총리직에 계신다면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고도 독립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범계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갑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을 출신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거의 모두 정치에 매몰되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한 냉정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래의 희망과 대안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희망을 주는 경제학, 영어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호프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를 합친 호프노믹스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경제학, 호프 노믹스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4월 11일 날 정부가 세월호가 기술적으로 인양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검토, 방법에 대해서 인양 방법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난 4월 11일 발표한 것은 중간 기술검토 보고입니다. 앞으로 최종적인 검토보고서는 4월 말 이전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훈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월호와 관련해서 선체를 인양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불확실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양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지금 작업을 하기에 평균적인 그런 날씨 조건이 계속 되고 또 기술적으로 실패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 기간은 1년, 비용은 한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석훈 의원 ‘1년’ 말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이것은 날씨도 좋고 기술적으로 실패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최적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일에 기상 상태가 좀 나쁜 날씨가 계속 된다면 인양 과정에서 부분적인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비용은 한 1500억 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기술적 부분에서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한 2000억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비용은 한 1000억에서 1500억 또는 한 2000억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지난 4월 6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4월 말 중대본의 기술 검토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내일, 그러니까 4월 16일 1주기가 되기 이전에 선체 인양이 결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그런 유가족들의 바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

적으로 맹골수도와 같은 해역 조건이, 상당히 조류도 빠르고 시기도 좋지 않은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세월호 규모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아직도 철저하고 실패가 안 되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중대본에서 나중에 인양 여부를 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잘 검토하셔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장관님, 고맙습니다.

다음,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 과정 중에 사내유보금이라는 말이 나왔고, 사내유보금이 마치 기업이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자금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강석훈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사내유보금은 상당 부분이 자산의 형태로 이미 바뀌어 있는 거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기업에 쌓여 있는 돈이 아닌데, 일반 국민들께서 그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풀어 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저는 한국경제가 여러 가지, 청년실업, 가계부채, 성장률, 소득 분배 악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당면한 큰 문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한 세 가지 경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첫째는 부채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가계부채 같은 거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돼 가지고 금융부실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기업 도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를 이연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산이라든가 투자가 위축이 돼 가지고 결국은 내수 부진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 어려워지는 게 된다고 봅니다.

○강석훈 의원 결국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실업,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영향을 받게 되지만, 특히 청년층하고 그다음에 노인층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뜩이나 청년들 일자리가 적은데 내수가 위축이 되게 되면, 결국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적어져 가지고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노인층이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은 자산의 한 79% 정도를 부동산 형태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한 68%인데요. 거기에다 또 수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디플레가 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게 청년층하고 노인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렇다면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저희는 앞으로 디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현 단계가 또 디플레 상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물가 하락이 상당 부분 공급 쪽 요인에 의해서 기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근원물가, 석유라든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를 보게 되면 아직도 2%대는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최근 몇 달간 계속 0%대의 물가 수준에다 또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게 되면 마이너스 수준이니까 디플

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도 이런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구조개혁도 같이 병행하는 이런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한 인식이, 저량은 조금 위기의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이터 몇 개를 보여 드리면, 전체 물가의 상태를 보여 주는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의 경우 지금 보여 드리는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0%대를 이미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게 금년, 내년에 0%대 이하로 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그것도 2011년 4.0%에서 2012년 2.2, 1.3, 1.3으로 1%대로 떨어지고 있고, 최근 3개월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로 %대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과 너무나,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 초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간단하게 보여 줄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소비자물가 떨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저기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일본이었고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상황하에서도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최악의 경우 2.3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에 진입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의원님 지적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성장에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라든가 미시적으로 유효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구조개혁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든가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디플레이션 대책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보다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우선시하는 듯하고, 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이전에 정부의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듯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하고 통화정책은 서로 어느 게 우선돼야 된다 하기보다는 동시에 병행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요, 위축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 대비 해 가지고 한 5.5%, 20조 원 증가해서 그걸 했고요. 또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한 59%까지 늘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재정자금은 조금 쓰면서 여유 있는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자 유치라든가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도록 여건을 만든다든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아마 거기에 발맞춰서 세 차례 금리인하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 주셨고 또 최근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도 한 5조 원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가야지 어떤 게 어떤 게 서로 우선시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석훈 의원 최근 정부 당국자와 한국은행 관련자분들께서 이렇게 혼신을 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증세,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소비·투자 같은 것을 더 위축시켜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은 모든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특히 한 번 빠지면 단기간에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늪과 같은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현재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입 상태에 있고 만약에 우리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먼 훗날 역사가 우리에게 물어 보기를 2015년 대한민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직전의 위기상황에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역사가 물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플레이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고 우리 경제에서 꼭 필요한 성장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무릇 '성장론'이라 함은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그것을 성장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 창출에 대한 논의가 없는 성장론이라면 그것은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이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 원인이 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2000년 이후에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비중이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의 잉여가 급속도로 감소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GDP 대비 비중이 한 15.9% 그렇게 됐는데 2014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8.1%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생산성을 하회하는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을 크게 하회시킨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임금 하락이 최근의 가계소득 하락의 주원인이라는 논점은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음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임금을 다 합친 것을 국민계정에서는 피용자보수라고 하지요. GDP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41.1%에서 2014년도에는 44.6%로 소폭이나마 피용자보수, 즉 임금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결국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영업잉여가 약 16%에서 그 절반인 8%로 줄어든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수혜는 받지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에만 보면 사회부담금으로 낸 게 44조 원 정도 되고 국민들이 받은 게 28조 6000억 정도 돼서 약 16조 원이 강제저축의 형태로 가계소득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14년에 오면 그동안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급속하게 늘어나니까 정부에 내는 돈이 163조 원인데 아직 제도가 미정착됐기 때문에 사회수혜금은 102조 원에 불과해서 61.6

조 원이 강제저축의 형태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가계소득 계정 이외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가계소득 하락 원인이 임금소득의 감소가 아니고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감소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강석훈 의원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고 할 때 임금 인상이 성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임금이 생산성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늘어나 가지고 고용총량을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석훈 의원 그리고 사실 성장론이라고 할 때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임금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조절이 불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성장론의 변수로 임금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석훈 의원 또한 지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금 부분은 그나마 최저임금 이슈인데, 최저임금 부분인데 최저임금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통계청 통계로 209만 명 정도 되고 고용노동부 통계로 5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저 차이가 통계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4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려 29%가 최저임금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최근에 반드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평균소비 성향을 놓고 보시면 과거 2010년도에 77.3%에 이르던 소비 성향이 최근에 오면서 점점 저렇게 72.9%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그래서 소비가 부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야당에서 그동안 금기시 되던 단어인 성장론을 제기한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생각하고 또한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야당에 찬사를 보냅니다.

무릇 우리가 성장 없는 복지는 사기이고 복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 창출이 없다는 측면 그다음에 성장론의 정책수단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성장론의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성장론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추세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최근 들어 가지고 지니계수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의 소득분배 지표가 지표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니계수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제작년에는 0.302로 개선이 됐고요. 중산층 비중도 최근 10년간 보게 되면 최고 수준인 65.6%이고, 그 밖의 분배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율이라든가 소득 5분위 배율 같은 것 모두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말씀하셨듯이 가처분 지니계수 추이가 이렇게 최근에는 내려가고 있고 중산층 비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체감이,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것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자영업

자 영업이익이 감소된다든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증가된다든가, 생산성을 하회하는 임금 상승 같은 부분들이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기업소득 증가율보다 낮춘 데 기인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양극화라든가 사교육비 격차, 사교육 격차겠지요. 사교육비 때문에 이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이동성이 좀 약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체감도에 작용을 해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지표와 달리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석훈 의원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너무 약화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많지 않은데, 보건사회연구원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머무르는 비율이 2010년도, 11년도 사이에는 69.1%였는데 저게 불과 2~3년 사이에 77.4%로 약 8%p가량 올라갔습니다, 빈곤에 머물 확률. 그 대신에 중산층으로 갈 확률은 29.6에서 22.3으로 7%p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빈곤층은 지속적으로 빈곤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계층 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부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제성장이라든가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교육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 교육기회의 확대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일자리고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자활사업 같은 것을 개선해서 탈수급할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을 제고를 한다든가 취약계층의 빈곤을 약화시키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소득계층 이동성이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진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회균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 기회균등 축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기회균등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기회균등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고 디플레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희망경제학, 호프노믹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혁신기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게 되면 하락 중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다시 반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희망을 확신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비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기반 창조경제의 희망을 노래하는 호프노믹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사다리, 나보다 내 자식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회 사다리, 오늘은 작은 기업이지만 내일은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소망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 사다리가 사방에 생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회균등 축진법을 제정합니다.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곧 희망이고 희망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제가 봐도 진짜 잘했어요.

강석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성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회가 빚어낸 어른들의 참사에 꽃다운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도하는 가운데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내일, 4월 16일 날 오후에 해외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9·11 주기를 앞두고 외국을 나갈까요? 지난 1년 전 대통령의 공백 7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일 그 아픔을 공유하지 않고 또다시 외국에 간다는 것에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부 자원 3사만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게습니까? 지금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이 이미 기 투자비가 31조 4000억 원이고요, 앞으로 추가 예정된 게 34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홍익표 의원** 아니, 사실관계만 확인합니다.

기 투자 31조 4000억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홍익표 의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회수액은 4조

6000억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일단 그 언저리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유가는 100불 이상 돼야 되는 것이지요? 100불 이하가 되거나, 예를 들면 암바토비 같은 경우 니켈광이 톤당 2만 5000불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지금 암바토비만 하더라도 이미 손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암바토비 같은 경우는 아마 전액 투자를 회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니켈 가격도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사실관계만 제가 짚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자원 3사,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 3사가 값아야 될 빛이 이미 내년에도…… 석유공사가 금년에도 1조 원이 넘고요, 가스공사 2조 8900억 되고 광물자원공사 1조 3800억입니다.

최근 5년간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해 가지고 이 3사 모두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홍익표 의원** 자, 이게 소위 얘기해서 빛내서 빛 갚는 것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지난 2년 이상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장관님 제가 질문은 사실관계만 분명하게……

이게 사실이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뭐……

○**홍익표 의원** 자, 그다음에 이 자원 3사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맞습니다.

○**홍익표 의원** 지난 2007년에 비교해서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석유공사 221%, 가스공사 389%, 광물자원공사 219%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홍익표 의원** 이게 금융부채, 단기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빚내서 빚 갚는 구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 부채가 높고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구조조정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더구나 우리 장관께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자주개발률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자주개발률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자원 수요량 분의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량이 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도입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석유를 도입한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거의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익표 의원** 하나도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자, 자주개발률이 갖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가격보다, 예를 들면 국제 시장가격이 폭등했을 때 낮은 가격으로 사올 수 있다. 두 번째, 비상 상황 또는 극단적 상황 때 우리가 자원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 분명히 자원 수급의 위기 상황 때는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분명히 해외자원개발에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장관님, 그게 허위라는 것이요, 자주개발률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시장가격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홍익표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주는 것은 배임행위가 됩니까?

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홍익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극단적인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일 때 모든 국가가 자기 자원들을 국내법에 의해서 외국 반출을 통제할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그것은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각국마다 계약에 따라서 국내 소비……

○**홍익표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공급 의무는 나와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장관님, 극단적 상황이라 할 때는 주로 석유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석유의 경우에도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100% 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홍익표 의원** 그것은 대부분이 그렇지요. 해당 국가가 적정 이익을 배상해 주면 되는 것이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내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가지고 있지만 계약사항에도 분명히 100%는 아닙니다.

○**홍익표 의원** 바로 이게 자주개발률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애국주의를 포함시켜서 말도 안 되는 것에 투자를 시킨 거예요. 이 자주개발률의 허상이 기관장 경영평가까지 반영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자원 관련 공사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합니다. 기관장은 떠나고 부실한 부채만 남은 것입니다, 부실한 기업과 부채만.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분명히 그것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책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공기업, 공공기관을 관할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사실은 임무를 방기했거나 아니면 청와대 권력에 의해서 침묵했던 두 가지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정부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못된 부분이 적잖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IRR과 NPV에 대한 조작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IRR 조작이 죽 저기 보이지만 5%에서 실제로 8.3%로 조작됩니다. 가스공사, 대부분의 사업이 부적격 사업인데 실제로는 IRR 조작해서 적격으로 바뀌어서 투자를 합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부적격을 실제로 조작을 해서 투자를 해 버립니다.

이거 누차 확인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예,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익표 의원**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 좀 나와 주세요.

원래 기재부 출신이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아까 제가 드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했어야 되는데 잘 못 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글썽요, 제가 기재부에 있었던 게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런 뜻을, 취지를 잘 받아서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MB 정부당시에 이런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해서 누가 돈을 가지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베스트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하베스트 관련해서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띄워 봤는데, 하베스트가 2008년 3분기부터 주식이, 매출하고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됩니다. 그래서 주가도 급전직하합니다. 그런데 2009년 2/4분기부터 이게 다시 주가

가 올라가요. 최고로 떨어졌을 때가 2009년 3월에 캐나다 달러로 3.9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수할 때 주식당 캐나다 달러로 10달러에 인수합니다.

자, 이것 어떻게 보세요?

이것 재미있는 게요, 당시 최경환 장관이 2009년 11월에, 국감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이 8월 달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 석유공사 보고에 의해서 2009년 3월부터 인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 분명히 얘기해요, 석유공사 보고…… 국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즉 2009년 3월에 3달러대로 떨어진 주가에서 인수를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10불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은머리 외국인, 소위 이 정보를, 우리 정부가 분명히 인수한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누군가는 이 사업의…… 미리 주식을 인수했다면 최고 2.5배에서 나중에 공지된 7달러로 인수했다 하더라도 공지된 상태에서 무려 40% 이상의 차익을 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하베스트에 상장된 거래주식의 내용은 지금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 금융 당국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게 BBK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였던 것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가격의 진실은요, 어느 게 진실인지 한참 그동안 국회에도 또 감사원에도 위에 있는 표를 허위로 보고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주식을 10불당 인수했다, 주가 1억 8000만 주하고 그것에 대한 10달러 그다음에 부채 22억 불 해가지고 40억 달러 안팎으로 인수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은 마치 상류부문, 하류부문 따로 계산을 한 것처럼 보고를 하다가요. 그것도 처음에는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회에,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거지요.

이런 국내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이런 주식 조작, 주가 차익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2010년에 CNK 양양철광 같은 경우 이미 금년 1월, 제가 작년 말에 국감 때 지적해서 관련 언론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금년 1월이요. 알고

계세요, 관련 내용?

○**금융위원장 임종룡** ……

○**홍익표 의원**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스포츠서울 주가가 무려 320% 폭등합니다, 한 달간. 그다음에 한전산업 주가도 365% 폭등합니다. 이런 게 비밀비재합니다.

다른 건도 있어요.

대한석탄공사의 몽골 석탄 개발, 무려 한 달 만에 516% 수직상승합니다.

한진피앤씨 주가도 두 달 만에 244% 올라갑니다. 이게 잠비아에서 우라늄광인데요. 여기에 MOU 체결하는 데에 박영준 씨도 참석을 합니다. 사진까지 찍었어요.

광물자원공사가 같이 협조해서 한 자원개발 사례가 무려 대부분이 이런 의심이 가는 게 36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부분 사업 취소됐습니다. 아무것도 성적이 없어요. 결국은 권력 실세가 개입되고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된 이후에 남은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한 부실을 국내 공기업이 떠안고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지난 사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생각 없으세요?

○**금융위원장 임종룡** 물론 단순히 그 주가가 크게 상승했거나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혐의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거나 또 혹은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공정거래에 관한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조현범 씨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조현범 씨 알고 계세요, 누군지?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도에서만 봤습니다.

○**홍익표 의원** 조현범 씨가 2007년 당시부터 유사한 시기에 엔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이것 동시에 다 자원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요. 엔디코프, 한 1개월 만에 322% 폭등합니다. 코디너스 역시 불과 20여 일 만에 211% 폭등하고요. 동일철강은 한 달 만에 무려 1747% 폭등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개별 주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만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익표 의원** 그래서 그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건?

앤디코프 관련돼 가지고 카자흐스탄 광산 지분 관련돼서 조현범 씨를 고발을 합니다. 관계자 한 8명들을 다 고발을 했고요. 실제로 이에 대한 증거가 나온, 두 명은 진술을 합니다, 1월 달에 이미 미공개정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증선위가 고발을 하지요.

증선위 고발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증선위에서 결의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홍익표 의원** 증선위가 고발할 때 어떻게, 그 절차를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허술하게 합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감독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증선위에서 검토를 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홍익표 의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기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현 대통령의 사위를 수사한 사건을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공개정보 시점을 증선위에서는 1월 17일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2월 28일이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해 줍니다. 다 무혐의 처리됩니다.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에 대해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 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FWS 간접투자를 했기 때문에 무죄다 하는데 이 FWS가 한국타이어, 조현범 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생성된 정보를 조현범 씨가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글썄, 증선위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것이고 그 수사한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입장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리고 조현범 씨 관련된 계좌 5개 계좌 중에 가족 계좌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

명박 대통령의 딸인 이 모 씨 계좌도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 사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저는 이 사건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필요하면 고발조치 해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 권한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아니, 의지가 있으시냐고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위원장 임종룡**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홍익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금융위원장 임종룡** 예.

○**홍익표 의원**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역 총리께서 지금 비리에 연루돼서 언론에 거론되고 검찰 수사가 임박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곤혹……

○**홍익표 의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자체만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현직 총리가 검찰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의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직을 내려놓고 가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른 의원님들 말씀에 답변 올린 대로 어느 특정인의 메모에 이름이 거명되고 또 특정인의 진술 하나만으로 막중한 자리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 의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총리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 사건이 도리어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하고 이완구 총리는 그냥 정권의 꼬리 자르기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홍익표 의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권의 몸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 부산시장 인천시장 그리고 또 다른 현역 의원, 이 세 분은 대선 자금과 관련 있는 분들이예요. 소위 얘기해서 사건의 폭과 휘발성이라고 그러지요, 확대될 가능성은 이 세 분의 것이 훨씬 더 큼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가정을 전제로 답변은 곤란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 진실을 좀 더 밝혀 봐야 되겠지요.

○**홍익표 의원** 총리께서는 왜 성완중 전 의원이 그렇게 총리를 원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저를 믿었던 것 같고, 동향이니까 또 지역구가 인근이고 같은 당이고 했는데, 저한테 3월 22일 날 전화가 왔을 때 또 그 이후로 여러 지인들로부터—의원님들이지요, 대부분—전화 왔을 때 내가 법과 원칙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또 보도를 통해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섭섭한 생각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그것 이외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3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충청 총리 만들려고 발 벗고 뛰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배신감이 더 큰 것 아닌가 싶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였는지 제가 몰랐을 뿐이지 아마 고인께서도 제가 청문회 과정이나 인준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제가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 고사성어 사면초가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고개를 끄덕임)

○**홍익표 의원** 제가 보기에는 성완중 전 의원님도 그렇고 이완구 총리 주변에도 지금 사면초가, 사면새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홍익표 의원** 이제는 충청권에 관련된 정치인들이나 거기 여론도 총리를 돌아서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정부 여당 내에서도 총리를…… 소위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처럼 총리한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좀 과한 말씀 같습니다. 정치란 제가 과문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실제로 진실도 발견될 것이고 또 향후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봅니다. 또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익표 의원** 총리께서 지역을 했던 게 청양·홍성 그리고……

홍성에서도 한 번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홍성·청양에서 두 번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충청의 고향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홍익표 의원** 진실을 확 밝히시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시는 그런 데 한번 기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제에 대선 불법자금을 포함해서 정치비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시는 진실을 다 밝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차제에 사법처리 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충청의 고향 출신 총리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에 기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의 고향을 그렇게 과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저는 대선 자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홍익표 의원**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와 언론의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을 통한 관권 선거, 차떼기가 아닌 상납에 의한 금권 선거로 얼룩졌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까?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정의와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고 불의가 정의보다 앞서고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허상이 본질을 대신하는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홍익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

문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현재 칠십 분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내일은 백 분 정도 되기를 바라구요.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의원(25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33인)

강길부	강창일	김경협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민기	김상훈	김성주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제남	김종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한표	김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결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성호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송영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류지영 민병주 박남춘 박맹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민석 박병석 박성호 박인숙 박지원
 안효대 염동열 우상호 우윤근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손인춘 심재권 안효대 염동열
 유성엽 유은혜 유일호 윤관석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은혜
 윤호중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유인태 유일호 이미경 이상민
 이만우 이미경 이병석 이상직 이에리사 이완구 이윤석 이종배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운룡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한성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재오 이해찬 임수경 장윤석 전순옥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춘석 전정희 정갑윤 조해진 주승용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최동익 최민희 함진규 홍문표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김진태 김희국 김희정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박윤옥 배재정 송광호 송호창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해진 양승조 윤후덕 이주영 정수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최경환 한기호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홍영표 황인자
 홍의락 홍익표 황영철

○속개 시 재석 의원(70인)

강길부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광립 김기준 김도읍 김민기 김상훈 김영우 김영주 김우남 김재원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한표 문희상 민병주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인숙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재현 서영교 서용교 손인춘 신동우 심재철 심학봉 염동열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대운 유의동 유일호 윤재욱 윤호중 이강후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구 이원욱 이장우 이종배 이종훈 이진복 이춘석 이한성 이헌승 임수경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의화 조명철 조해진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홍익표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71인)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김광립 김광진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춘진 김한표 김 현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박남춘 박맹우
 박병석 박성호 박인숙 박지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손인춘 심재권 안효대 염동열
 오제세 우윤근 유기준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이미경 이상민
 이에리사 이완구 이윤석 이종배
 이진복 이찬열 이철우 이한성
 이해찬 임수경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정갑윤 조해진 주승용
 최동익 최민희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청가 의원(14인)

길정우 김진태 김희국 김희정
 박윤옥 배재정 송광호 송호창
 양승조 윤후덕 이주영 정수성
 최경환 한기호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박형준
 입법차장 구기성
 의사국장 장대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완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출석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금융위원장 임종룡

【보고사항】

○의안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서기호·전해철·임내현·박지원·이상민·김제남·정진후·박원석·서영교·심상정 의원 발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서기호·김제남·박원석·박지원·서영교·심상정·이상민·임내현·전해철·정진후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서기호 · 전해철 · 임내현 · 박지원 · 이상민 · 김제남 · 정진후 · 박원석 · 서영교 · 심상정 의원 발의)

이상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하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4 신경민 · 이개호 · 박광운 · 한정애 · 배재정 · 이미경 · 홍종학 · 노웅래 · 박홍근 · 김성곤 · 김광진 · 이목희 · 인재근 · 박남춘 · 박민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심재철 · 김태원 · 양창영 · 이강후 · 이노근 · 김용남 · 주호영 · 권성동 · 정미경 · 홍철호 · 김영우 · 이철우 · 황영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4 나성린 · 이한성 · 김세연 · 조명철 · 강석호 · 주영순 · 박맹우 · 박명재 · 이만우 · 류성걸 의원 발의)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함진규 · 유승우 · 김동완 · 홍지만 · 김한표 · 이종진 · 박윤옥 · 김기선 · 이장우 · 이우현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5. 4. 14 전해철 · 박광운 · 민홍철 · 진선미 · 김광진 · 조정식 · 이개호 · 김경협 · 박남춘 · 부좌현 · 박민수 의원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주영순 · 김종태 · 정미경 · 정용기 · 이완영 · 이종훈 · 양창영 · 이노근 · 김상훈 · 나성린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양승조 · 변재일 · 박홍근 · 박민수 · 이목희 · 설훈 · 최재성 · 이찬열 · 박주선 · 오제세 · 최동익 · 김용익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2015. 4. 14 김춘진 · 남인순 · 이언주 · 김경협 · 이원욱 · 김기준 · 서영교 · 홍영표 · 한명숙 · 정청래 · 우원식 · 문희상 · 최민희 · 유승희 · 이인영 · 이개호 · 진성준 · 김영주 · 김현 · 윤후덕 · 전병헌 · 김성곤 · 이춘석 · 박범계 · 임내현 · 변재일 · 유성엽 · 신정훈 · 이학영 · 전정희 · 노웅래 · 유대운 · 박남춘 · 박병석 · 최동익 · 우윤근 · 백재현 · 안규백 · 안철수 · 박영선 · 백군기 · 김민기 · 원혜영 · 은수미 · 홍의락 · 김제남 · 김태년 · 윤호중 · 김기식 · 김한길 · 부좌현 · 홍익표 · 신학용 · 김상희 · 이미경 · 정세균 · 장하나 · 김성곤 · 김윤덕 · 이상직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국회의원정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5. 4. 14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148 한화꿈에그린 372-1702(경서동) 정영태 외 12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2015. 4. 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효자동 3가) 정호영으로부터 김성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